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대비 최신개정판



주간동아 선정 2023 한국브랜드만족지수
교육(온·오프라인 로스쿨) 부문 1위

해커스

김종수

로스쿨 면접

200주제

로스쿨 면접은 물론 LEET(언어이해·추리논증·논술)까지 대비 가능한
법학이론·최신시사·모의문제·기출문제 수록

저작권자 © 2025, 김종수

이 책의 모든 내용, 이미지, 디자인, 편집 형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 발췌하거나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체험북
비매품



해커스 POST-LEET 1위 김종수 최종합격 패스 수강료 **최대 66% 지원**

* 합격완성 올인원 패스 기준

강의경력 18년의 POST-LEET 전문가 김종수의 커리큘럼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자소서	8월		10월	
	기본이론	실전적용	실전적용	파이널
	자소서 작성법 특강 + 온라인 첨삭 [변호사 첨삭]			
면접	기본이론	심화이론	실전적용	파이널
	법학적 사고력 기본강의 법철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등 기본이론 학습	법학적 사고력 심화강의 출제 가능한 시사이슈 주제에 대한 말하기 방법 학습	실전 최신쟁점정리 26학년도 면접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을 면접 시험 직전 총정리	2026 (가)군 기술 복원해설 (가) 군 기술문제 복원을 통한 (나)군 실전 대비

[해커스POST-LEET 1위] 해커스로스쿨 2022년~2024년 자소서+면접 인강 매출 기준

[17년 연속] 2009년~2025년 김종수 선생님 면접 교재 출간 기준

[적중] 2025학년도 복원된 로스쿨 면접 기출기준

[현장강의 조기마감] 해커스로스쿨 학원 POST-LEET 기준

[베스트셀러] yes24 수험서 자격증 베스트셀러 LEET 법학직성시험 분야(2024년 7월 22일~28일),yes24 주별 베스트 기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커스POST-LEET 1위 김종수 오직 합격으로 증명합니다.

[해커스POST-LEET 1위] 해커스로스쿨 2022년-2024년 자소서+면접 인강 매출 기준

저정량 극복, 중앙대 로스쿨 최종합격



LEET 119.6 | GPA 99.4 | TOEIC 975

김종수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단순히 면접 답변 요령을 배우는 것을 넘어, 법학적 사고와 논리적인 답변을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 법조계와 사회에서 주목받는 시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의 중 다뤘던 AI와 법률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실제 면접에 나와,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강의는 3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압축적으로 내용을 다루어 직전에 듣기에 매우 좋았던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전문적인 포맷강의로 인하대 로스쿨 최종합격



LEET 130.3 | GPA97.1 | TOEIC 930

김종수 선생님은 포스트리트 분야에서 1타 강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수험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강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면접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커스로스쿨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강의 시스템으로 명성이 높으며, 특히 면접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김종수 선생님의 강의는 면접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제공하시는 모의 질문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염두에 둔 피드백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해커스로스쿨 POST-LEET 강의를 선택한 것은 제가 면접에 성공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리트에 집중, 부산대 로스쿨 최종합격



LEET 129 | GPA 96 | TOEIC 910

법학적성시험이 끝나고 해커스로스쿨 입설 특강에 참여했었는데, 김종수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제자들의 성공담과 포스트리트 전략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해커스로스쿨에서 김종수 교수님 면접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김종수 교수님 강의와 교재를 중심으로 개념과 시사 쟁점, 법학지식을 습득하려 노력했고, 나아가 스터디를 적극 활용해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자세를 고치고 속도와 음량을 조절하는 등 좋지않은 습관들을 없애려 노력했습니다.

이 책의 목차

1권 기본편

이 책의 구성 및 특징

10

Part 1 | 로스쿨 면접 오리엔테이션

Chapter 01 최신 3개년 기출 주제 분석 14

- 1. 로스쿨별 3개년 기출 주제 분석 15
- 2. 주제별 3개년 기출 주제 분석 22

Chapter 02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29

Chapter 03 로스쿨 합격전략 시간표 33

- 1.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33
- 2. 로스쿨 입시일정과 시기별 준비사항 35

Chapter 04 교재 사용설명서와 스터디 활용법 39

- 1. 스터디 구성과 운영방법 39
- 2. 본서와 강의를 스터디에 활용하는 법 46

Chapter 05 합격생 정량스펙과 합격수기 47

- 1. 합격생의 정량스펙 48
- 2. 합격생의 합격수기: 면접과 자소서 52

Chapter 06 시험당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전 팁 61

Part 2 | 기본 이론

Chapter 01 법의 철학적 기초 66

- 001 사실과 당위 68
- 002 인간본성론 77
- 003 의무론적 윤리설, 목적론적 윤리설 84
- 004 절대주의, 상대주의 90
- 005 법의 형식과 내용 97
- 006 롤스의 절차적 정의 104
- 007 형식중심주의 109
- 008 사적 처벌 114
- 009 자유주의: 성인 간 성매매 120
- 010 공동체주의: 존속대상범죄 가중처벌 130
- 011 공리주의: 핀토 리콜 136
- 012 자유지상주의: 장기매매 140
- 013 롤스의 자유주의: 가산점 제도 146
- 014 샌델의 공동체주의: 가격폭리 규제 153
- 015 딜레마: 장학금제도 개선안 159
- 016 자연법과 실정법 164
- 017 도덕과 법: 인치와 법치 173
- 018 법치주의: 명확성의 원칙 180
- 019 정의와 법적 안정성: 고지 의무 189
- 020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196
- 021 통치행위: 긴급조치 제9호 202
- 022 시민불복종 209
- 023 저항권 218

Chapter 02 민주주의 224

- 024 국가와 폭력성 225
- 025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231
- 026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236
- 027 지식인의 정치 참여 247
- 028 포퓰리즘 252

정보통신기술과 민주주의	262	비혼단독출산	449
독재, 다수결, 만장일치	267	낙태	453
내란범 처벌: 원로원 최종권고	272	보호출산제	462
다수결의 전제와 한계	277	유전자 편집기술	470
선거제와 추천제	281	인신구속절차	475
의무투표제	288	신상정보, 위치정보 공개	480
입법부: 면책특권	294	CCTV	488
입법부: 위헌정당 해산	299	공익 목적의 사생활 공개	494
행정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304	자기정보결정권과 잊혀질 권리	501
행정부: 사면권	308	종교의 자유	507
사법부: 배심제	313	양심의 자유: 공익신고자 보호	512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320	인터넷 실명제	518
인권과 주권	327	가짜뉴스	525
국가 주권의 한계	337	과다노출죄	531
전쟁과 테러	342	음란한 표현 규제	536
인도적 무력개입	348	집회 금지	543
불법체류 노동자의 인권	353	성범죄자 취업 제한	549
난민 수용	357		
이민자 문호 확대	362		
		Chapter 04 민법	553
		078 신의성실의 원칙	555
		079 반사회적 법률행위	560
		080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565
		Chapter 05 형법	571
		081 응보와 교화	575
		082 수형자 처우 개선	580
		083 범죄의 원인	586
		084 엄벌주의	592
		085 성범죄 강력처벌	597
		086 그루밍 성범죄	603
		087 한국형 제시카법	607
		088 심심미약, 주취감경	613
		089 위법성 조각사유	617
		090 현사미석녀자 연령 하향	623

이 책의 목차

2권 심화&실전모의편

Part 3 | 심화 시사이슈

Chapter 01 경제·산업정책 10

091	국가의 시장 개입: 공매도 규제	10
092	국가의 경제 개입: 재정, 통화정책	16
093	성장정책과 분배정책	23
094	재분배정책: 부자 증세	28
095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33
096	공유경제	39
097	플랫폼 규제	43

Chapter 02 지식·정보정책 47

098	지식재산권	47
099	거래비용	53
100	지식재산과 독점 규제	57
101	강제실시	62
102	AI	70
103	전투용 로봇	74
104	AI 창작물의 권리 주체	78
105	4차 산업혁명	82
106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88

Chapter 03 복지정책 92

107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92
108	복지논쟁	97
109	기본소득	103
110	저출산: 출산장려금, 증여세	109
111	고령화와 노인문제	117
112	국민연금	122
113	건강보험: 외국인 의무가입	127

Chapter 04 기업·노동정책 131

114	ESG 경영	131
115	기업집단법	135
116	상속세 폐지	139
117	가업상속공제 확대	143
118	광고 규제	148
119	다크패턴 마케팅	154
120	민영화	157
121	최저임금제	163
122	중대재해처벌법	169
123	상법 개정안	174

Chapter 05 소비자정책 179

124	리콜	179
125	제조물 책임	186
126	징벌적 손해배상	194
127	집단소송제	200

Chapter 06 환경정책 206

128 자연관	206
129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	212
130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220
131 아마존 파괴와 해결방안	227
132 NDC 상황과 탄소국경세	231
133 기후재난의 국가 책임	235
134 수도권 매립지 갈등	238
135 국립공원 케이블카	242

Chapter 07 부동산정책 248

136 토지 공개념	248
137 종합부동산세	255
138 토지공유제와 토지가치공유제	260
139 부동산 대출 규제	265

Chapter 08 의료·보건정책 271

140 원격의료	271
141 담배 규제	276
142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280
143 의대 정원 확대	284
144 백신 접종 의무화	288

Chapter 09 교육정책 292

145 기여입학제	294
146 학교폭력 해결방안	298
147 학생인권과 교권	302
148 청소년 SNS 사용규제	307
149 지역비례 선발제	312

Chapter 10 국방·외교정책 319

150 징병제와 모병제	319
151 여성 징병	324
152 병력 부족과 PMC	329
153 대북전단	333

Chapter 11 사법정책 339

154 법원의 독립	339
155 법관의 재판상 독립	344
156 법관의 신분 보장과 탄핵	349
157 법 왜곡죄	354
158 상급심의 하급심 구속력	357
159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362
160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	371
161 법조비리 해결방안	376
162 AI 판사	381
163 변호사의 성공보수	387

Chapter 12 시사이슈 391

164 동물권	391
165 동물실험	396
166 개 식용 금지와 동물원 폐지	399
167 반려동물 보유세	405
168 GMO	410
169 보호입원제와 사법입원제	414
170 사법적 개혁과 입법적 개혁	420
171 부채와 불평등	425
172 이기심과 이타심	429
173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434
174 민족주의	438
175 자살	444

이 책의 목차

Part 4 | 면접 모의문제

모의문제 사용설명서	452
176 강원대 로스쿨	453
177 건국대 로스쿨	456
178 경북대 로스쿨	457
179 경희대 로스쿨	459
180 고려대 로스쿨	461
181 동아대 로스쿨	465
182 부산대 로스쿨	466
183 서강대 로스쿨	468
184 서울대 로스쿨	471
185 서울시립대 로스쿨	474
186 성균관대 로스쿨	475
187 아주대 로스쿨	476
188 연세대 로스쿨	479
189 영남대 로스쿨	481
190 원광대 로스쿨	482
191 이화여대 로스쿨	483
192 인하대 로스쿨	485
193 전남대 로스쿨	486
194 전북대 로스쿨	487
195 제주대 로스쿨	488
196 중앙대 로스쿨	490
197 충남대 로스쿨	494
198 충북대 로스쿨	495
199 한국외대 로스쿨	496
200 한양대 로스쿨	497

Part 5 | 면접 모의문제 해설

176 강원대 로스쿨: 포서	502
177 건국대 로스쿨: 전문자격증	504
178 경북대 로스쿨: 탁아소	507
179 경희대 로스쿨: 학문의 목적	509
180 고려대 로스쿨: 인류보편어	511
181 동아대 로스쿨: SI 판사	513
182 부산대 로스쿨: 생명윤리	515
183 서강대 로스쿨: 원조와 복지	517
184 서울대 로스쿨: 사회질서	519
185 서울시립대 로스쿨: 판결문 공개, 비혼단독출산	521
186 성균관대 로스쿨: 국민투표	523
187 아주대 로스쿨: 부와 행복	524
188 연세대 로스쿨: 시장의 자율성	526
189 영남대 로스쿨: 이민 확대	529
190 원광대 로스쿨: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531
191 이화여대 로스쿨: TFT 전략	533
192 인하대 로스쿨: 부채와 불평등	534
193 전남대 로스쿨: 외국인 참정권	537
194 전북대 로스쿨: 지역 통합	540
195 제주대 로스쿨: 지역할당제	542
196 중앙대 로스쿨: 대중문화	544
197 충남대 로스쿨: 시사이슈	546
198 충북대 로스쿨: 시사이슈	550
199 한국외대 로스쿨: 사행산업	553
200 한양대 로스쿨: 소비의 목적	556

3권 기출편

Part 6 | 면접 기출문제 & 해설 (2025~2019)

강원대 로스쿨 (2025~2019)	10
건국대 로스쿨 (2025~2019)	36
경북대 로스쿨 (2025~2019)	65
경희대 로스쿨 (2025~2019)	107
고려대 로스쿨 (2025~2019)	132
동아대 로스쿨 (2025~2019)	155
부산대 로스쿨 (2025~2019)	188
서강대 로스쿨 (2025~2019)	230
서울대 로스쿨 (2025~2019)	255
서울시립대 로스쿨 (2025~2019)	311
성균관대 로스쿨 (2025~2019)	328
아주대 로스쿨 (2025~2019)	356
연세대 로스쿨 (2025~2019)	417
영남대 로스쿨 (2025~2019)	445
원광대 로스쿨 (2025~2019)	487
이화여대 로스쿨 (2025~2019)	512
인하대 로스쿨 (2025~2019)	531
전남대 로스쿨 (2025~2019)	570
전북대 로스쿨 (2025~2019)	605
제주대 로스쿨 (2025~2019)	650
중앙대 로스쿨 (2025~2019)	699
충남대 로스쿨 (2025~2019)	736
충북대 로스쿨 (2025~2019)	775
한국외대 로스쿨 (2025~2019)	809
한양대 로스쿨 (2025~2019)	842



추가 학습 자료 [PDF]

자기소개서 작성법

* PDF는 해커스로스쿨(lawschool.Hackers.com)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커스 김중수 로스쿨 면접 200주제

Part 1

로스쿨 면접 오리엔테이션

- Chapter 01 | 최신 3개년 기출 주제 분석
- Chapter 02 |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 Chapter 03 | 로스쿨 합격전략 시간표
- Chapter 04 | 교재 사용설명서와 스터디 활용법
- Chapter 05 | 합격생 정량스펙과 합격수기
- Chapter 06 | 시험당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전 팁

1. 스터디 구성과 운영방법

로스쿨 면접에서 수험효율이 가장 좋은 방법은 스터디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스터디도 아무 의미가 없다.

면접 스터디를 구성할 때, 지원하는 로스쿨에 따라 구성하기도 하고 다양한 학과 학생들로 구성하기도 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면접 스터디를 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할 의지가 투철하고 의지를 실제로 실행하는 구성원이 모이는 것이다. 나머지 사항들은 이에 비하면 다 부차적인 것들이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다. 이러한 사람들끼리 스터디가 구성되면 감정적으로 티격태격할 수는 있으나, 서로 열심히 하려다가 보니 갈등이 생긴 것이라 스터디가 깨지지도 않고 결국 사이가 좋아진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라도 스터디에 끼어들면 공부를 열심히 한 구성원들이 “나만 바보같이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스터디 전체가 하향평준화된다.

이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뒤에서 설명할, 스터디 규칙을 엄격하게 정하고 예외없이 실행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필자는 학원에서 소수 정원제 강사지도 면접스터디 강의를 18년째 진행 중이다. 해마다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스터디는, 여러 스터디 중에서도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칙을 예외없이 실행하는 스터디였다.

면접 스터디는, ① 개인의 공부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스터디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논증과 말하기를 연습해야 한다. 스터디는 다수의 수험생이 모이게 되는데, 스터디가 깨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하기 때문이다. 혼자 할 수 있는 것, 혼자 해야 하는 것을 굳이 여러 명이 모여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원칙과 계획, 규칙을 세워야 한다. 아래 내용은 필자가 학원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사지도 면접스터디 운영방법과 이 교재, 강의 활용방법이다. 이를 참고하여 활용하기 바란다.

(1) 강사지도 면접스터디의 운영원칙

① 학생은 공부와 숙제를 하고, 스터디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연습하며, 선생은 평가하고 개선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② 각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과 기본논리는 법학적 사고력 기본강의에서 전달하며, 강사지도 면접스터디에서는 이 지식과 논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③ 강사지도 면접스터디에서는 선생이 주제를 선정하고 이 주제에 대한 수강생들의 토론을 거쳐 개인발표를 하는 것이 수업의 기본운영방법이다. 이 개인발표는 메모 없이 진행되며, 수강생들 중 무작위로 선정하며, 수강생들 전체 앞에서 공개발표한다. 이 개인발표는 강사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이 동영상을 수강생이 전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으로 공유한다.

④ 수업시간에는 강사가 계속 말하기를 강제하고 비교하고 촬영하고 평가하고 개선방법을 피드백한다. 배경지식과 관련논리에 대한 학습은 순수하게 개인의 몫이고, 이 지식과 논리를 말하는 연습은 스터디 토론과정에서 미리 연습해야 한다. 강사지도 면접스터디 수업은 1주일에 6시간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수험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 인원 구성

적정 스터디 인원은 5-6명이다. 각 스터디 조는 5-6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면접준비기간 동안 숙제와 스터디를 함께 한다.

(3) 강사지도 면접스터디 숙제

① 숙제는 김종수의 <로스쿨 면접 200주제> 교재를 대상으로 한다. 숙제는 구체적으로 교재의 1/2 분량에 해당하는 100개 주제에 대한 찬반 대본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다.

② 대본(스크립트)이라 함은 실제 면접시험에서 그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미리 논리적인 글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숙제는 강사가 제시하는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진행한다. 실제 면접 시험장에 가지고 갈 자료를 직접 만드는 것인데, 스터디 조원들이 숙제를 나누어 진행하기 때문에 형태가 안 맞아 내용을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④ 4주간 100개 주제를 모두 스스로 찬반 대본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각 스터디 조당 배분되는 1주일 숙제 분량은 25개 주제이다.

⑤ 첫 숙제와 스터디는 단 1개의 주제라도 빨리 숙제를 진행하고 스터디를 해보아야 한다. 경험을 해보아야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스터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Comment AI를 이용해서 숙제를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양심에 맡길 문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장 쉬운 방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험생에게 최악의 방식이다. 면접시험장에서 AI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직접 고생해서 만든 자료가 기억에 남아 시험장에서 말로 나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4) 스터디 조별 숙제 진행방법

① 스터디 조별로 1주당 25개 주제를 찬반 입장 모두 대본을 작성하려면, 스터디 구성원 6명을 기준으로 하여 한 명이 4개 주제의 대본을 작성한다.



Comment 주제 중에 찬반이 나누어지지 않는 주제는, 핵심내용을 다른 스터디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어진 양식의 표 안에 정리하자.

② 모든 스터디 조원은 매일 1개 주제(스터디별로 미리 약속한 숙제 개수)에 대한 대본을 정해진 시간까지 스터디 카톡방이나 구글독스,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한다.

③ 스터디 조원들은 자신이 한 숙제를 제외한 다른 스터디원이 작성한 숙제자료를 다운 받아서 자신 외의 다른 스터디원이 작성한 숙제 대본 모두를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모두 체크한다. 만약 스터디원이 6명이고 하루에 1개의 주제를 숙제로 정했다면, 하루에 업로드되는 숙제의 분량은 6개가 된다. 스터디원 한 명이 담당하는 숙제는 1개 주제이지만, 읽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숙제가 5개 주제가 된다. 그래서 결국 하루에 할당되는 6개의 모든 주제를 직접 공부한 것이 되는 셈이다.

④ 아래의 표는 전년도 강사지도 면접스터디에서 진행한 강의, 숙제, 토론 스케줄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표에서 음영처리가 된 부분은 혼자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스터디에서 논리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개인공부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숙제 업로드 기한: 오전 2시까지(월-토 매일 1개 주제)					
오전	타인주제 5개 검토	타인주제 5개 검토	타인주제 5개 검토	타인주제 5개 검토	법학적 사고력강의	법학적 사고력강의
오후	면접스터디 소수반강의	스터디 토론	면접스터디 소수반강의	스터디 토론	스터디 토론	스터디 토론
저녁	스터디 토론	자기주제 1개 숙제	자기주제 1개 숙제	자기주제 1개 숙제	자기주제 1개 숙제	자기주제 1개 숙제

⑤ 모든 스터디 조원이 만나는 시간, 즉 스터디 토론 시간에 위 체크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그래야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문제 있는 부분을 모두 고친 후에 스터디 조장이 이를 취합한다. 스터디를 할 때 노트북을 지참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고치는 것도 좋다.



Comment 자신이 실제 면접장에서 평가교수와 생각하고 다른 학생의 대본에서 논리상 문제가 있어 감점한다면 어느 부분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자신이 읽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감점 포인트가 된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스터디원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대본 작성을 담당한 스터디원이 다른 스터디원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설득해야 하고 이 내용을 대본에 추가하는 것까지 해야만 숙제가 끝난 것이다.

⑥ 스터디원은 두 가지 의무가 있다. ㉠ 개인별로 할당된 주제에 대한 대본을 성실하게 작성할 의무, ㉡ 다른 스터디원이 한 숙제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할 의무를 행해야 한다.

⑦ 개인별로 할당된 주제에 대한 대본을 작성할 때, 교재에 있는 표를 참고하되 그보다는 더 상세하게 논증해야 한다. 어느 정도로 논증해야 할 것인지는 함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부여된 숙제 양식 표를 가득 채울 정도의 분량으로 해야 한다.**

⑧ 스터디 조장은 모든 스터디 구성원들의 스터디를 통해 교정이 완료된 1주당 25개 주제 파일을 1개의 파일로 만든다. 조원들은 이 파일을 유지하도록 한다.

⑨ 개인숙제와 스터디 검토를 마친 자료를 1회독 자료라 한다. 이 1회독 자료를 재검토하고 수정하고 체득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3회독 자료로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가 된다. 면접시험이 있는 11월 2주 차까지 3회독하여 면접관이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입에서 말이 나올 때까지 이해하고 공부하고 연습해야 한다.

⑩ 1회독 자료 완성 = 면접 교재에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한 개인 숙제와 스터디까지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1회독 자료 완성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종료시점으로 한다.

⑪ 2회독은 심화과정 종료시점부터 파이널과정 종료까지 완료한다. 2회독은 1회독 자료를 재검토하면서 논증과정의 논리 완결성을 보강하고 시험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예시를 보강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급한 마음으로 이때부터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천하지 않는다. 잘못된 논리, 부적절한 예시가 입에 붙으면 습관이 되어 계속 잘못된 논리의 말하기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잘못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들여서는 안 된다.

⑫ 3회독은 (가)면 면접시험 전까지, 그 이후에 4회독을 한다. 3회독은 철저하게 말하기 연습으로 해야 한다. 2회독을 통해 완성한 자료는 논리적으로 보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모든 주제에 대해 직접 말하면서 자동으로 튀어나온다는 인상이 생길 때까지 말하기를 반복해야 한다. 3회독 이후부터의 스터디는 주제 분량을 정해두고 모든 스터디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발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 다른 스터디원은 자료를 보면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찾고 지적하면서 채점자의 시각을 익힌다. 이를 반복하면서 회독 수를 올려간다. 4회독은 주제 분량을 늘리면서 진행한다. 예를 들어, 3회독은 하루에 진행할 분량을 30개 주제로 한다면 4회독부터는 60개로 늘리는 것이다.

(5) 스터디 조장의 역할과 스터디 규칙

① 스터디 조장은 숙제를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 숙제 자료를 취합하고, 문제점을 고친 자료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분리되면 자료가 통일되지 않는다.

② 스터디 조장은 스터디 조원들에게 숙제 배분규칙을 전달한다. 배분 방법은 교재의 주제순서와 스터디 조원번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교재의 순서대로 각 주제를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스터디 조원들에게도 번호를 부여한다.

③ 각 스터디는 조장과 총무를 1명씩 선출한다. 조장은 숙제 배분과 자료 정리를 담당한다. 조장의 합격률이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숙제 배분과 자료 정리를 담당하다 보니 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게 되기 때문이다.

④ 총무는 디파짓과 벌금 관리를 담당한다. 총무는 통장 하나와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준비한다. 스터디원들로부터 디파짓을 받아 통장에 입금하고 체크카드로 모든 지출을 한다. 이후 통장정리를 하면 결산서가 된다. 카카오�뱅크나 토스 모임통장 등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⑤ 디파짓이 필요한 이유는, 강사의 경험상 디파짓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 싫어서 공부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다 보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스터디 장소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마지막에는 전체숙제 대본을 출력하고 바인딩해야 하므로 스터디 공동자금이 필요하다.

⑥ 스터디 규칙과 처벌방법은 반드시 정해야 한다. '모두 다 열심히 하겠거니'라는 식의 안이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대학 수업에서 조별 발표 수업을 한 번이라도 해본 대학생이라면 모두 공산주의가 왜 붕괴했는지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스터디 조원 중 한 명이라도 숙제를 정해진 시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피해를 본다. 만약 매일 1개의 주제 대본을 업로드하기로 정했다고 하자. 업로드는 언제까지인지, 업로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10시까지 1인당 1개의 주제를 업로드하기로 정했다면, 10시를 넘겨 업로드했을 때 벌금 얼마, 그 이후는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스터디별로 협의를 거쳐 규칙과 벌금을 정하기 바란다. 앞으로 법조인이 되어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⑦ 스터디규칙을 모두 함께 정하고 이를 명문화한 뒤, 카톡방이나 인터넷 카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두어야 한다. 스터디규칙은 모든 스터디원이 필요할 때 명확하게 언제나 확인가능해야 한다.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명문화된 형태로 스터디규칙을 정해야 한다.

⑧ 스터디규칙에 벌금제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1달 안에 많은 분량의 숙제를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비례할 수 없다. 개인의 선의(善意)를 믿지 말고, 제도적으로 정해진 규칙과 벌금을 믿어야 한다.

⑨ 벌금은 기왕이면 많은 금액을 강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정해진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 벌금은 내지 않는다. 벌금이 너무 높다거나 규칙이 너무 강하다고 주장하는 스터디원이 바로 그 벌금을 낼 가능성이 큰 자이기 때문에, 즉 스터디 숙제를 안 해서 너의 합격을 방해할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벌금을 내도록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⑩ 일반적으로 숙제 업로드 기한은 오전 2시에서 6시 사이로 잡는 경우가 많다. 스터디 시간이 오후 혹은 저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숙제를 그 전에 업로드해야만 다른 스터디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스터디원 각각이 담당한 숙제가 있어야, 스터디원 전체가 모여 논증과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숙제 업로드 시간은 오전 2시를 추천한다. 오전 6시로 할 경우, 미루다가 결국 날을 새게 되어 장기간 공부에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바쁜 일이 있는 날이라면 숙제를 미리 해두어야 하는 것이지, 사정을 봐달라고 하소연할 일이 아니다.

⑩ 스터디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각자가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터디원들이 모두 모인 시간에는 논증과정에 대한 토론만 해야 한다. 그런데 미리 검토할 시간이 없으면 모두 모인 소중한 시간에 자료를 읽느라 바빠 토론을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모여서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결국 스터디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⑪ 벌금은 크게 2가지 의무에 관련된다. 먼저, ㉠ 개인별 숙제에 대한 벌금은, 개인별로 부여된 숙제를 카톡방 혹은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할 때 ㉡ 늦게 업로드했을 때의 벌금, ㉢ 숙제를 업로드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이 있다. ㉣ 모두 모여서 숙제에 대한 검토를 하는 스터디에 관한 벌금은, ㉤ 스터디 모임에 늦었을 때의 벌금, ㉥ 결석했을 때의 벌금이 있다.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스터디규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⑫ 숙제를 업로드할 때, 파일명을 규칙화한다. 만약 규칙을 정해서 업로드하지 않으면 이후에 모든 주제를 합쳐야 할 때 시간이 낭비된다. 예를 들어 “주제번호-담당자.hwp”라는 형태를 추천할 수 있다. “001-김중수.hwp”라는 파일이 있다면 200주제 중 1번 주제 정리자료이고 담당자는 김중수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구글 독스 등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좋다.

⑬ 조장은 스터디가 끝나 교정이 완료된 자료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든다. 정리가 완료된 이 파일을 1주일 간격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파일명은 “O주차 자료.hwp”로 한다. 이 파일 4개를 1달 후에 한꺼번에 출력해서 바인딩해야 한다.

(6) 스터디 조별 자료 활용방법

① 각 스터디 조에서 만든 주제 찬반 입장 자료는 9월 이후에 2회독, 3회독을 하여 보강을 하도록 한다. 이 주제들을 반복 숙달하여야 실제 면접시험에서 출제되는 응용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② 이 자료를 최소 3회독하여 계속 수정하여야 한다. 3회독 이하의 자료는 시험장에 들고 갈 자료가 아니라 기본자료에 불과하다.

해커스 김중수 로스쿨 면접 200주제

Part 2

기본 이론

Chapter 01 | 법의 철학적 기초

Chapter 02 | 민주주의

Chapter 03 | 헌법: 기본권론

Chapter 04 | 민법

Chapter 05 | 형법



법은 형식과 내용이 결합된 것이다. 인간이 개인으로서 나타나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개인과 타인이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규칙이 발생했다. 이 규칙이 발전하여 법이 되었다. 따라서 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해당집단과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한 내용, 즉 가치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법은 문구에 불과하므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1. 법의 내용과 의미

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이처럼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한 가치가 바로 법의 내용과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법을 보아도 어떤 법이라도 1조는 그 법의 목적이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직선거법 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공직선거법이라는 수단이 달성하려는 내용과 의미는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2. 법의 형식과 절차

법이 특정한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이라면, 특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살펴본 공직선거법의 목적이 공정한 선거라는 내용과 의미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 준비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선거권을 준다거나, 대통령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국민은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이것이 형식과 절차에 해당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국민만 출마하거나 출마할 수 없거나 하는 등으로 내용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단지 40세 이상인 모든 국민은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형식적 규정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의 형식과 절차는 개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모든 개인은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국민들이 스스로 정한 형식적 요건에 따라 일부 제한을 둘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출마할 형식적 권리는 갖고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인지, 행정부를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어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것인지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만이 할 수 있다.

3. 자유주의와 법실증주의의 문제점

자유주의와 법실증주의는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하고, 정당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 내용은 옳다고 의제했다. 즉, 많은 수의 개인들의 결정은 내용적으로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수가 곧 옳음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나치와 히틀러는 독일 국민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에서 유대인 학살에 관련한 법을 제정하였고 히틀러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유대인 학살정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으나,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명백하게 내용적으로 옳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

4. 형식과 내용의 결합, 균형

법의 내용만을 중시할 경우, 개인의 자유가 심대하게 제한될 우려가 크다. 법의 목적이 되는 내용적 가치가 실현되기만 하면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용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범죄자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고 하자.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져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범죄자의 모든 정보나 사생활을 공개하고 범죄를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다섯 집씩 묶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감시하게 하고, 어느 집에서 범죄자가 나올 경우 묶인 다섯 집을 모두 처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법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지상목표가 되면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법의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길 경우,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용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의 형식만이 중요하다면, 어떤 형식과 절차에 의해 법이 확정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국민투표라는 형식과 절차를 통해 법이 확정된다고 하자. 만 19세 이상의 국민 중 50% 이상의 투표율, 50% 이상의 찬성으로 법이 확정되도록 형식과 절차를 규정했다고 하자. 이 형식과 절차를 모두 만족하여 만 19세 이상의 국민 90%가 투표에 참여하고 90%가 찬성한 법안이 있다고 하자. 그 법안의 내용은 해당국가의 약 3% 비율에 해당하는 소수민족을 학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법은 정당한 것이 된다.

따라서 법의 내용만을 추구해서도, 형식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법은 형식과 내용의 균형이 달성되어야만 한다.

5. 라드부르흐 공식: 형식 우선, 명백하게 부정의한 내용

법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인간의 육체와 정신처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의 형식을 보장해야 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형식과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절차의 결과가 명백하게 내용적 문제점을 가질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 다수가 다수결에 의해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형식적 정당성이 있고 개인은 이 법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법의 내용이 고문이나 학살, 영장 없는 체포 등을 담고 있어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형식적 정당성이 있는 법률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제정된 법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형식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명백하게 반인권적이거나 명백하게 부정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의 내용이 명백하게 부정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6/9 이상이 위헌을 선언해야만 하고, 판결문을 통해 해당법률의 위헌성이 명백하게 부정의함을 증명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민 다수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있으나, 법률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스스로 제정할 수는 없다. 법률의 내용은 주권자인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

6. 읽기 자료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민주주의 없는 인권이란 형용 모순이다. 민주주의가 부재한 곳에서 시민은 예측적인 위치에 처하므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자율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 시민에게 주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될 규칙을 제정하는 데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부재는 시민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인권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의 한 요소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는 핵심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타인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의 행동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러한 소극적 의미의 행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필연적으로 연관된다. 시민은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정부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시민에게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제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행동의 자유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정치적 참여권의 보장 없이는 행동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인권을 적절하게 향유하는 데에도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우리는 인권 실현 과정의 역동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어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갈색 눈이나 검정 모자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상태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의 해석을 통해 다른 이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능동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인간이 자신의 견해를 공적으로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현된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해석하는 능력과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나) 인권과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했다. 인권은 개인의 차원에서 인간 존엄, 생명, 자유, 평등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했다. 그에 비해 민주주의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의사결정 절차로서 발전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 이외의 추가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컨대 민주주의는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만 인권의 요구는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양보가 가능하지만 인권에 대해서는 양보가 불가능하다. 인권은 민주주의보다 더 절박한 인간의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자기결정을 하나의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이 요구하는 집단적 자기결정의 수준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한 수준보다 낮다. 예를 들어, 시민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갖추지 못했지만 시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그 나름의 정치 과정을 통해 공공선을 실현하고, 시민에게 적정 수준의 건강, 교육, 경제적 안정, 신체적 안전 등을 보장해 주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 시민에게 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국가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최선의 정치 제도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 과정에의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는 사회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이는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규범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이를 용인하는 것이 관용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정치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이유로 시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겠지만,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입각하여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선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사회의 정치 제도는 합당한 것으로 용인해야 한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요구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Q1.** 제시문 (가)에서 민주주의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의하면 특정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제시하시오.
- Q2.**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 Q3.**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각각 제시하시오.
- Q4.** 위 논의의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추가질문

- Q5.** 입법 과정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수당인 여당은 입법하고자 하는 법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며 시급성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소수당인 야당은 그 법안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여 다수당의 입법을 저지하고자 한다. 만약 이 법안이 민주주의 발전에 꼭 필요한 법이라 한다면 비민주적인 방법, 즉 소위 날치기 통과를 시켜도 좋은가?
- Q6.** 그 법이 국가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가?
- Q7.** 다수당인 여당이 소수당인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심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은 채 법안을 날치기 의결했다면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 소수당 의원들의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 Q8.** 날치기 법안 통과 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Q1. 모범답변**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를 뜻합니다. 개인의 자유 중에서도 특히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신, 왕, 절대군주, 국가, 사회, 타인 등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개인도 다른 개인의 의사결정에 간섭할 수 없고, 개개인의 의사결정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심사숙고한 결과로서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에 의하면 모든 개개인은 의사결정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아야 하고, 이 기회에 대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틀린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개개인의 의사결정은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Q2. 모범답변

제시문 (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민주주의가 선행해야 인권이 실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통해 개인은 스스로 목적이 되는 존재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민주주의는 모든 이에게 절차적, 형식적으로 자유를 보장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를 통해 인권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성인에게 형식적으로 보장되는 1표라는 선거권, 대의기관 선출, 대의기관의 다수결, 법률 공포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결과로써 각 개인들이 생각하는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과 정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 조정, 타협되어 어떤 인권의 내용이 실현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제시문 (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내용적 정당성을 지닌 반면,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것으로 집단의 의사결정방식에 불과합니다. 인권이라는 내용을 실현하는 형식이 반드시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의 보장을 위한 형식으로서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먼저 나타났을 뿐이며, 서구식 민주주의 외에도 싱가포르의 리완유가 주장했던 유교 민주주의를 통해 인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필연적 관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Q3. 모범답변

제시문 (가)와 같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파악할 때, 인권의 형식적·절차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인권의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민주주의가 선행되어 형식적으로 개인에게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여 인권의 내용까지도 자연스럽게 실현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1인 1표나 다수결 등의 형식적 절차만을 강조한다면 사회적 소수자에게 실제로 내용상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국민 90% 이상의 지지를 받아 구성된 나치 정부는 형식적으로 정당한 정부입니다. 그러나 이 나치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하여 내용적으로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인권침해를 저질렀습니다.

제시문 (나)처럼 인권의 내용만을 강조한다면, 절대국가의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만약 옳은 인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 외의 다른 형식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면, 마치 플라톤의 철인왕처럼 일반인보다 우월한 존재가 인권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그 입장을 듣고 평가하는 형식적 절차보다 옳은 인권의 내용을 빨리 실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미 옳은 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종교를 빌미로 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중세 시대를 겪었고, 도덕을 앞세운 수많은 독재자를 역사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Q4. 모범답변

인권과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권의 내용과 민주주의의 형식이 결합하여야 진정으로 인권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여 인권의 실질적 내용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개별국가의 주권을 절차적으로 보장한다면 인권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형식을 통해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가능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권 실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권의 내용은 민주주의 제도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여 민주적 제도 확립에 기여합니다. 올바른 인권의 내용을 합의하기는 어려우나 명백하게 반인권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고문이나 영장 없는 구속 등 명백한 반인권적 내용에 대한 합의를 통해 명백하게 인권을 훼손하는 민주적 결과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을 향하도록 유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Q5. 모범답변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법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면 목적의 정당성도 의심을 받습니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더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대왕정은 이미 옳은 가치가 전제되어 있는 정치체제입니다. 신(神)의 뜻처럼 이미 정당하고 옳은 가치가 정해져 있다면 대화와 토론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옳은 가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실현할 것인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는 옳은 없다고 생각하여 국민 개개인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대화와 토론이 없다면 개인의 가치 판단이 틀렸음을 전제해 놓은 것이 되어 민주주의의 목적에 반합니다. 따라서 비민주적 절차를 통해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96현리2

Q6. 모범답변

해당법안이 국가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면, 성실한 토론을 통해 상대방 의원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을 하면 국민의 압력 때문이라도 상대방 의원들도 법안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가 잘 안된다고 성급하게 법안을 날치기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국회의원 간에 불신만 가중될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고 대화와 토론이 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변화 가능성을 믿는 체제입니다. 단기적으로 날치기 통과가 더 쉽고 국가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날치기 통과는 시킨다면 민주주의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성급하게 날치기 통과는 시켜서는 안 됩니다.

Q7. 모범답변

법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인 국가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공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습니다. 야당은 소수당이기는 하나 주권자인 국민이 지지한 결과 의석을 얻은 것입니다. 입법부에서 대화와 소통의 기회 자체가 차단되었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Q8. 모범답변

날치기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항권은 헌법질서가 전면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날치기법안 통과는 위법하나 헌법질서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국민은 국회나 정부에 법개정을 청원할 수 있고, 개정된 법이 권리를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97헌가4



1. 기본 개념

(1)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국민은 피치자(被治者)이면서도 치자(治者)가 되며, 이를 루소는 동일성 민주주의라 하였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가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과 국가기관의 관계는 명령위임·기속위임 관계이다. 국민이 A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직접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국민의 의사에 기속되어 A라는 의사를 구체화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치자이다. 그러나 A라는 의사를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제정되고, 국민투표로 법이 확정되면, 국민은 법률에 구속당한다. 따라서 국민은 치자이면서 피치자이다. 국민은 자기의사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A라는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대표기관은 국민의 의사에 기속당하지 않으므로 A가 아닌 B라는 국가의사가 결정될 수 있다. 이를 자유위임, 무기속위임이라 한다. 따라서 국민은 피치자일 뿐이다.

루소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말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에 대해, 주권자의 의사는 결코 대표될 수 없다고 한다. 대표자라는 개념은 인류의 품위를 훼손하고 인간이라는 말을 욕되게 만든 불공정하고 터무니없는 봉건 정부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³⁵

(2)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

첫째, 국민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집단지성론에 따르면 함께 사유하고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집단은 소수 전문가보다 탁월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의견을 조정한다면 인류의 지식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도 디자인, 제품기능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제품을 출시한다. 적절한 정보,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 자유로운 의사교환 등이 보장되면 대중은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자들은, 일반 국민은 통치를 직접 하기에는 비이성적이고, 감정에 쉽게 휘말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전문지식이 없다고 폄하한다. 소수 전문가들의 지식이 다수 국민의 지식보다 우월하므로 전문가에게 통치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IA,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 등 엄청난 국가예산을 쓰는 정보기관들은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 당국은 9.11 테러를 예측할 수 없었다. 전문가라 하여 일반대중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둘째, 국민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 사람은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다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직접 국가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의식을 갖기 힘들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책임의식, 참여의식 약화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국민은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든지, 인기영합적 정책에 찬성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이 국가정책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국민은 정책 결정에

³⁵ 루소, <사회계약론>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기를 계발해 나가려면 국민의 국가의사결정 참여는 필수적이다.

셋째, 국민의 정치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다. 국가의사결정에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국민은 정치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소외감으로 인해 제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국민의 불신감 증대는 사회질서 혼란 등의 문제로 연결된다.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면 정치적 소외감을 털고 국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

넷째, 국민 참여는 전체주의를 야기하지 않는다. 20세기 초반 대중이 나치즘이나 파시즘에 열광한 적이 있고, 지금도 한나 아렌트³⁶가 경고했듯이 전체주의의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소수 엘리트에게 통치권을 전유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허용될 수 없다.

전체주의는 지도자가 정책발안권을 독점하고, 국민 간의 의사소통을 막은 채 지도자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주입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20세기 전체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국민을 권력의 주체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조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시즘하의 이탈리아, 나치즘하의 독일, 스탈린의 소련 등은 모두 언론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게슈타포나 KGB 등의 비밀경찰은 시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억눌렀고, 전체주의 정권은 선전부 등을 통해 시민의 여론을 조작하였다. 전체주의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기보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참여가 보장되려면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대안을 채택했을 때 야기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대자에게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 이를 전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제시된 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국민은 새로운 안을 제안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지도자가 의제 제안을 독점한다면 국민은 실질적인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국민이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3)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

첫째, 대중조작과 독재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플라톤은, 대중은 쉽게 조작당할 수 있다고 한다. 대중사회는 개인이 원자화된 사회이다. 개인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이 때문에 조작을 통해 쉽게 대중을 통제할 수 있다. 기계기술의 발달로 지배자가 각종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대중을 더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배자는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대중을 조작한다. 조작된 동의는 지배자가 국민을 강제하는 것보다 권력의 부담을 줄여준다.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미명 아래, 정치 지배자는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 소환제를 통해 반대세력을 파멸할 수 있다. 대중 조작에 성공한 정치지배자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는 합의에 의한 지배를 가장한 독재체제로 이어지기 쉽다. 인간은 문예부흥, 종교개혁, 프랑스혁명을 통해 신(神)이나 군주와 같은 권위체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구속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인간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불안에 빠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 줄 권위체를 찾는다. 어떤 권위자가 국민들에게 확실한 목적과 수단을 제시하면, 국민들은 권위자에게 복종한다.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은 인간은 오히려 자유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피를 원

³⁶ 한나 아렌트(Hanna Arendt, 1906~1975):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이며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 2차 세계대전 등 세계사적 사건을 두루 겪으며 전체주의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아렌트는 스승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실존주의를 정치이론에 적용하여 현대사회에서 방향성을 잃은 군중들의 '세계 상실'을 이야기하였다. 파시즘과 스탈린주의 등 '전체주의'에 대한 그녀의 분석은 오늘날까지 인정받고 있으며 '악의 진부성'이란 개념은 나치스의 인종주의적 대학살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서로는 <폭력의 세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진부성에 대한 보고>,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등이 있다.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은 오히려 자유를 버려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은 강력한 권위(국가, 정치지도자 등)에 종속함으로써 자유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또한 타자와의 맹목적인 동조를 통해 고독감과 불안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이 등장했다고 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대중이 삶의 지향점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대중은 자기보존본능마저 잃어버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무관심한 상태이다. 선동가들은 이들에게 민족적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정체감을 부여함으로써 대중을 쉽게 동원할 수 있다. 국민을 이러한 대중으로 본다면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일반 국민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된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근대사회의 규모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대중의 정치참여는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대중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를 골라내어 유능한 자를 교육시켜 유능한 소수가 통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한다.³⁷⁾

셋째,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소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의 이익이 저해될 것이다. 국민의 참여는 국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익집단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적 이익을 위한 결합된 집단들이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시설의 건설 여부를 주민의 참여로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장애인 시설을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쓰레기 소각장과 같이 국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지만, 지역 주민이 혐오시설이라 반대하여 설치되지 않아 국가비용만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의 정책참여는 이익집단 간의 충돌로 인해 사회갈등을 키울 수 있다.

넷째, 국가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는 다수 국민의 참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정책결정의 적시성을 놓쳐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참여는 정책결정시기를 늦어지게 한다. 시기를 놓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 그 결과 국가 발전이 저해된다.

다섯째,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인해 공익이 저해될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대표자는 선거 등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다음 선거 등을 고려한다면 대표자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정책결정은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등의 활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참여로 정책을 결정했는데 공익에 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국민이 시민단체 구성원이나 이익집단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책임지지 않는 시민단체 등은 무책임한 정책을 주장할 수 있다.

2. 읽기 자료



2007헌마1001



포퓰리즘과 헌법

³⁷⁾ 쉘페터(Schumpeter)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대중의 정치참여에 대해 소극적이다. 다만 국민은 선거 주기마다 경쟁하는 엘리트를 선택하고 응징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는 통치를 할 엘리트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변화시킬 수 없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근대 민주주의가 이룩한 가장 빛나는 제도적 혁신은 대의제 민주주의였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그 집단적 의사를 시민들의 대표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도 시민들은 지배를 하지만(the rule of people), 그들은 자신의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의 실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시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나, 선거는 주인인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대표들을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장치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많은 경우 선거는 정책의 선택이 아니고 인물 또는 정당의 선택이며, 설사 인물, 또는 정당의 선택이 특정 정책의 선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음번 선거에서 시민들은 특정한 정책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처벌과 보상을 내릴 수 없다. 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정부가 수행한 전체 정책패키지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실적과 과실에 대한 책임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 시민들은 선거를 통한 회고적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연립 정부 하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다른 정당에 의해 장악되어 있을 때, 시민들은 책임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밖에도 정치인 또는 정당이 경쟁하지 않을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희박할 때, 정치인들이 재선을 추구하지 않거나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재선의 추구가 제한될 때 시민들이 현직의 정치인 또는 정당을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힘들게 된다.

둘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주인인 시민과 대리인인 대표 간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쉼페터적인 엘리트 민주주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인(대표)과 시민 간의 분업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정치적 분업이 시민들의 정치적 소외감, 정치적 무관심, 냉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가 정치전문가(정치인, 선거운동가, 로비스트, 언론인, 여론조사전문가 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치는 자신과 상관없는 원거리에서 있는 영역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시민과 대표들 간의 거리는 더욱 넓어지고, 정치전문가들이 주권자인 시민을 대체하는 기술 관료적 민주주의가 강화된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강력하게 조직되고 발언권이 강한 특수 이익집단이 민주적 토론과정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표들은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보다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이러한 특수이익의 지배를 제어하고 시민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공론의 형성 장치는 미흡하다. 여론조사와 언론이 이를 대신하나 여론조사는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언론은 공론의 형성자라기보다는 이익집단의 대변인이다.

마지막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수결주의에 의거하여 집단의 의사를 결정한다. 그런데 다수결주의는 소수파의 다수파에 대한 순응을 강제한다. 다수결주의는 기존의 여론조사, 국민투표와 같은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에 의해 강화되고 이는 ‘다수의 독재’를 심화시키고, 소수파의 배제를 초래한다. 소수파의 의사가 공동체의 의사형성에서 경청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민주적 공동체는 심각한 해체의 위기에 직면한다.

Q1. 국가정책 결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정하고 논거를 들어 논증하시오.

- Q2.**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당시에는 획기적이라 평가될 만큼 국민의 참여 확대를 시도한 독일 바이마르 헌법 체제의 결과로 나치와 히틀러가 출현하여 전체주의가 발흥한 사례가 있다. 국민 참여 확대는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Q3.**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의 정책정보 수집과 의사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악영향을 제시하시오.
- Q4.**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 대의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대의기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활용한 인터넷 정치를 참여 민주주의라고 볼 것인지, 포퓰리즘으로 보아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추가질문

- Q5.** 단지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터넷 정치로 인한 포퓰리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그리고 국민의 참여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포퓰리즘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 Q6.** 인터넷의 이용 확대를 통해,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 Q7.**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SNS를 통한 민주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SNS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SNS로 인한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SNS를 통한 국민 참여 확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Q8.**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나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둔 SNS 사용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 진행자들을 통칭하여 인플루언서(Influencer)라고 한다. 인플루언서의 시초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가 SNS 등 자신의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Q9.** 소셜테이너³⁸ 혹은 인플루언서의 SNS를 활용한 정치적 발언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이 가져올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³⁸ 소셜테이너: 소셜(Social, 사회)과 엔터테이너(Entertainer, 연예인)의 합성어로, '사회적 발언을 하는 연예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연예인들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 성향·사상에 대한 발언을 자제했던 것에 비해, 소셜테이너로 불리는 연예인들은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병행한다. 이와 비슷하게 폴리테이너(Politainer)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폴리테이너란 폴리틱(Politics, 정치)과 엔터테이너의 합성어로,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숄츠(David Schultz)가 1999년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본래는 연예인 출신의 정치인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개념의 범위를 넓혀 정치인이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 행위를 하는 연예인을 의미한다.



Q1. 모범답변

국민의 국가정책 결정 참여는 타당합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장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인은 자유를 행사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대표자가 국민을 배제한 채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자유를 행사하고 국민은 이에 복종하는 책임만을 진다면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는 한 국민은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없고, 통치의 관객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국민이 직접 자기의사를 국가의사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지배받아 자기지배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정책 결정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의 효과는 높이고 정책 비용은 낮춰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물론 대표기관의 결정은 정책 결정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 비용이 낮다고 하더라도 정책 집행 비용이 높다면 정책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배제한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책은 추진력을 잃기 때문에 결국 정책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국민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면 정책 의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정책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국가정책 결정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인간은 신중해지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실수할 기회, 반성할 기회, 과거의 틀에서 깨어나 발전할 기회를 영원히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민이 통치에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할 때 국민은 국가정책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자세와 그것을 과감하게 단행하는 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적 학습을 통해 국민은 성숙한 주권자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Q2. 모범답변

국민 참여의 확대가 전체주의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세기 독일 국민이 보여준 나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참여에 반대하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란 국민이 발안(發案)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하고, 반대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이를 전달할 기회를 가지고, 그런 후에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치의 발흥과정에서 이런 국민의 참여과정이 보장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괴벨스의 여론 선동과 비밀경찰의 탄압 등과 같이 국민의 진정한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 참여의 과잉이 아니라 국민 참여의 부족이 전체주의의 발생원인입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의 확대가 전체주의로 이어졌다고보다 국민 참여의 결여로 인해 전체주의가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Q3. 모범답변

좋은 영향으로는 국민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지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악영향으로는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혼란과 정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국가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의사소통을 하여 피드백을 통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와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국가와 경제 권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국민이 국가의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보 생산의 주체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등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생산되고 이것이 확증편향 등의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과 결합되어 문제를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급정보는 접근하기에 여전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대중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의 불균등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허위정보와 정보 불균형으로 국민의 의사 참여는 국가 혼란과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습니다.

Q4. 모범답변

인터넷 정치를 참여 민주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신이 스스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 문제로 시행하고 있는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책임을 분리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등 대표가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그 책임은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은 자유는 없으면서 책임만 지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정치적 소외감, 무관심, 무력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SNS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적은 비용으로 표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국가의사결정에 반영된다면, 국민은 정치적 소외감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정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Q5. 모범답변

포퓰리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를 막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정치가 현실화되면서 익명성에 의한 사이버 테러, 즉흥적인 의사표현, 정보 격차로 인한 정치 과정의 분극화, 포퓰리즘적 의사결정으로 인터넷 정치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일반이 합리적 이성을 갖추지 못해 대화와 토론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국민 불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시민들이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인신공격, 허위정보 유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출발부터 성숙한 시민을 전제로 한다면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전체주의는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므로 조용하나,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경쟁하고, 대화하다 보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할 기회를 가질수록 시민도 의사를 표현하고, 경쟁하고, 토론하고, 생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론의 장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하여 대규모 시민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민주적 학습이 실현되어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두려워 해, 국민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포퓰리즘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기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 국민에게 인터넷 정치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참여를 국정 운영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큰 이유가 물리적 거리로 인한 비용 문제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거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의 구축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촌이나 오지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은 여전히 설치비용의 문제로 거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오히려 참여 기회가 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농어촌 지역 등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주적 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보격차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의 사용, 정보 이용 요금 등으로 소득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져 소득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갈등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정보통신기술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사용 보조를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정보통신기기 지급,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윤리교육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상의 공론장은 익명성으로 인한 즉자적 반응, 유언비어의 유포, 인신공격성 발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인터넷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자정(自淨) 캠페인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 확대가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6. 모범답변

현재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의제를 직접 민주주의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민주적 학습을 할 수 있어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은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나, 국민여론으로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국민여론대로 국가정책을 결정한다면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정책의 경우 국민이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할 수는 있으나 무기체제 개발이나 구성, 군사전략이나 전술 등 구체적인 실천방법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국민의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이 손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민여론만으로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인터넷은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국가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표출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데 유용합니다.

단,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 국가의사 결정에 한계가 있다고 하여 미래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누적시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주적 학습과정을 통해 국민의 국정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Q7. 모범답변

SNS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표출하고 다른 사용자와 손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대화와 소통의 기회가 증대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개인의 생각을 각자의 심사숙고한 가치관의 결과로 존중하고,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무시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다른 견해로 받아들여,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정제되고 발전해나가는 것입니다. SNS는 이러한 민주적 의사소통과정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대화와 소통의 장(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정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특유의 확산성으로 인해 자정작용(自淨作用)이 일어나 허위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정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SNS의 문제점으로 허위사실의 무분별한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SNS는 정보를 생성하고 확산시키기 쉬워 정제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SNS 사용자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즉자적으로 발언하는 경향이 큼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특히 전자정보는 복제가 쉽고 널리 확산되어 한번 생성되면 100% 삭제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해될 우려가 큼니다. SNS는 이러한 비가역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큼니다.

Q8. 모범답변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사회적 쟁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전제로 유지됩니다. 최근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등, 민주주의의 전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인플루언서가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이 발언할 경우 정치적 의사가 정립되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들의 정치적 의사가 쏠림현상을 일으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기보다 인플루언서의 영향에 의해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9. 모범답변

소셜테이너의 정치적 발언을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검증되고 논의되면서 발전합니다. 최근의 정치 현실을 볼 때, 국민의 정치적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테이너의 정치적 발언은 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규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셜테이너의 정치적 발언이 규제된다면 점차 이러한 규제가 확장되어 여러 사회적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로 주목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올바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려면 먼저 이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소셜테이너의 발언이 가짜뉴스이거나 혐오표현일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목적은 민주주의의 실현과 개인의 자유·권리의 안정적 보장입니다.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은 이 목적을 훼손하므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법적 처벌의 강화와 시장의 자율 규제, 인터넷 사용 교육과 캠페인 강화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법적 처벌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나 악성댓글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로 인해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미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시장의 자율 규제가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나 악성댓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인터넷의 확산성으로 인한 비가역적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가짜뉴스나 혐오표현을 드러내는 등의 방송채널에 대한 광고수익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자율규제는 가짜뉴스나 악성댓글 자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것이 재생산되거나 널리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채널 운영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역기능을 자극하여 이윤을 얻을 수 없음을 예측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향 자체를 포기할 것이어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 교육과 캠페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 사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 교육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짜뉴스나 악성댓글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캠페인을 활성화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자신의 발언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1. 기본 개념

(1) 사생활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공간인 자신의 주거를 국가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다. 주거의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주거의 자유는 국가에 대해 충분한 주거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주거공간의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주거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점유되고 있는 일체의 건조물과 시설을 말한다. 노동이나 직업의 장소도 주거라 보는 것이 통설이다. 영업 중인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은 주거가 아니지만 대학 강의실이나 연구실, 주거이동차량, 선박 등은 주거가 될 수 있다. 주거의 자유가 사생활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사생활의 자유는 사생활의 내용 보호이기 때문에, 주거 내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대화를 도청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된다. 그러나 주거 내에 들어가지 않고 주거 밖에서 창문을 통해 주거 내의 대화를 도청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는 해당하나 주거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기재가 되어있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단,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할 때에는 영장 없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이 허용된다.



2016도5814

(2) 거주·이전의 자유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소와 거주지를 정하거나 자유롭게 이전(移轉)할 수 있는 자유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기본권의 성격도 있다. 국민과 국내 법인은 주체가 되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미성년자의 가출의 자유는 부모의 교육권과 거소지정권이 우선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북한지역에 자유롭게 이주할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북한 지역에서 통치권이 미치는 남한지역으로 이주할 자유는 인정된다. 국외이주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입출국의 자유, 국적변경의 자유 역시 인정된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자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자기정보통제권)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홀로 있을 권리로 소극적 권리였다. 그러나 자기정보의 관리와 통제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면서 적극적인 권리의 성격도 함께 지니게 되었다.

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이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아니다. 사자(死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나 사자의 사생활의 비밀침해가 사자와 관계있는 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생존자에 관해서 문제가 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사(私事)의 비공개와 인격적 징표의 영리적 이용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사사의 비공개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움과 난처한 개인의 일들이 본인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나만 간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격적 징표의 영리적 이용금지는, 초상, 성명 등 인격적 징표를 영리적 이용에 의해 침해되지 않을 권리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단,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의 존중하에서만 가능하다.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하는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익 이론에 따르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되는 교육적·보도적 가치가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범죄인의 체포·구금, 공중의 보건과 안전, 사이버 종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로, 공적 인물 이론이 있다. 공적 인물은 일반인에 비해 사생활 공개 시 수인해야 할 범위가 넓으므로 언론의 자유 영역이 넓어진다는 이론이다. 공적 인물이란 정치인, 고급관료, 연예인, 운동선수 등 자발적으로 유명해진 인사와 범죄인, 그 가족 등 비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가 있다.

2. 쟁점과 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

찬성론: 사회공동체 보호	반대론: 피의자 인권
[청소년 보호] 청소년 성매매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주어 달성되는 재발방지효과는 매우 크다.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는 사회적 비난과 사회적 축출 우려가 개인의 범죄행위를 억제한다.	[자기책임원칙 위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인 징역 또는 벌금형에 더해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부가되는 형벌이다. 즉 범죄자 자신의 자유에 따른 책임에 더해 사회적 가치 훼손에 대한 처벌을 더하는 것이다. 더욱이 신상공개로 인한 명예 실추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비가역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범죄 예방] 범죄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킨 것으로, 국가는 이를 알려 일반 국민이 이러한 범죄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성매수는 특별한 보호대상인 청소년의 신체를 사고파는 범죄행위이다. 이 정보를 공개해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가 이를 회피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좌제 금지 위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범죄자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아님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해 가족들이 수치심이나 공포를 느끼게 된다면 이는 책임 없는 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 것으로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공공복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알린다. 또한 범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거친 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형과 같이 범죄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 제한은 미미하고, 사회적 이익은 크다.	[공공복리 저해] 형벌은 범죄자를 교화해 범죄 재발 예방에 목적이 있다. 신상공개가 되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배척되고,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과도한 형벌을 받았다는 억울함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반감과 불만을 가지게 된다.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높인다.

3. 읽기 자료

(1)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① 4인의 재판관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청소년 성매수 등 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법 제20조 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범죄인들은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인하여 해당 기본권의 제한 여지를 일반인보다는 더 넓게 받고 있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 정도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 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



2002헌가4

그렇다면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5인의 재판관

청소년 성매매의 폐습을 치유함에 있어서는, 형벌이나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전체 청소년 성매수 사건 중 적발되는 사건의 비율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기도 전에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무릇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탓에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ultima ratio)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형벌까지 부과된 마당에, 형벌과 다른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면서,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다. 더구나, 신상공개로 인해 공개대상자의 기본적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데에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거나 불확실한바, 이러한 점에서도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성범죄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성폭력범죄는 ‘인격 살인’으로 불릴 만큼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성폭력범죄를 경험할 경우 심리적인 상처와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개인들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피해도 야기한다.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면 여성의 사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자녀의 안전한 보육과 통학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공익은 매우 크다.



2011헌바89



066 문제

신상정보, 위치정보 공개

🕒 답변 준비 시간 10분 | 답변 시간 10분

- Q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논거를 제시하시오.
- Q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거를 제시하시오.
- Q3.**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 Q4.** 현재의 전자발찌 시스템을 확장하면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기술적으로는 국민 혹은 지역 주민이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범죄자의 위치정보를 국민 혹은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 Q5.** 어린이들은 범죄에 취약하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 어린이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칩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 Q6.** 경찰은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미아 발생 시 신원확인을 위한 스마트폰 앱을 내놓았다.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지문인식기능을 이용해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에 대해 가족이 지문, 사진, 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다. 경찰서, 파출소 등에 방문해서 직접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의 효과는 매우 크다. 실종아동이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39분,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82시간이 소요되었다.
- 이처럼 큰 효과가 입증되자 아동이나 치매질환자 등에 대해 지문 등 사전등록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재반론하시오.



Q1. 모범답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해야 합니다. 사회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공유된 가치를 지켜야 하는데 청소년 보호는 이러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학습받아 장래 사회구성원이 되어 공동체의 주역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성매수한 자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공유된 가치를 훼손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공유된 사회적 가치를 해친 자가 누구인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여 사회 전체에 알리고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사회구성원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자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타당합니다.

Q2. 모범답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책임원칙과 공공복리를 논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먼저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책임원칙이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책임만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행위 이상의 책임을 부과한다면 이는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인 징역 또는 벌금형에 더해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부가되는 형벌입니다. 즉 범죄자 자신의 자유에 따른 책임에 더해 사회적 가치 훼손에 대한 처벌을 더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신상공개로 인한 명예 실추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비가역적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책임에 더한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서 과도한 처벌입니다. 따라서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과 신상공개를 당한 성범죄자의 사생활의 자유가 충돌합니다.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신상공개로는 청소년 성범죄 방지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청소년 성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을 보호할 시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청소년 성범죄가 예방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⁷⁷ 오히려 신상공개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해당하여 공개자의 인격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범죄인의 명단이 공개되어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없게 되어 범죄인은 사회에 대한 보복심마저 키울 수 있습니다.⁷⁸ 또한 범죄자의 가족도 혼인생활, 직장생활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

⁷⁷ 지역여성과의 멘토링이나 임신·성·부모역할 교육, 성적·신체적 학대 카운슬링, 의사소통과 분노관리 카운슬링, 가정폭력 카운슬링 등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정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

⁷⁸ 신상공개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우리 사회의 특성 때문에 단순히 청소년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라고 하는 근대 형법의 기본정신마저 훼손한다.

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청소년 성범죄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피해만 발생시킬 뿐이므로 공공복리를 저해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Q3. 모범답변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타당합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범죄의지를 통제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통제가능성이 높고, 범죄 후 검거 가능성이 클수록 범죄 예방 효과가 높습니다. 전자발찌의 경우 일단 성범죄자를 미리 추적하여 범죄 전 통제가능성이 높고,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위치가 드러나 범죄자를 찾아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가 공격으로 증명되어 증거로 작동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타당합니다.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범죄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는 대상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노출되지는 않으므로 범죄인의 인격권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사회복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효과가 충분하고 범죄자의 인권침해도 최소화되므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타당합니다.

Q4. 모범답변

성범죄자의 위치정보를 국민 혹은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 이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자 또한 국민으로서 자유의 주체가 됩니다. 개인의 위치는 사생활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여 보호 가치가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법률로써 정한 기관 외에 다른 주체가 개인의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Q5. 모범답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칩 부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칩 부착은 감시사회, 전체주의 사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발전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통제 수단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국가는 범죄 예방, 사회 안전이라는 당위적 목적하에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 영역을 확대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에 도취해 국민의 기본권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미끄러운 경사면 위에 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이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어린이 위치 추적 전자칩 부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린이만 추적할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러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를 모두 감시하고 추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는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어린이뿐 아니라 범죄자,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도 감시·통제하고자 할 것입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하에 감시와 통제를 수용한다면 개인은 더 이상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빅브라더에 의해 감시받고 통제받는 국가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주의의 우려가 있으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위치추적 전자칩 부착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Q6. 모범답변

아동, 치매질환자에 대한 지문 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타당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고, 평등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아동, 치매질환자에 대한 지문 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타당합니다. 개인은 범죄 등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여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였으므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과 치매질환자 등은 성인과는 달리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자신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것임을 이미 위임받았으므로 이들의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지문 등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이를 모르거나 부주의할 경우 아동과 치매질환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없어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범죄의 우려나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지는 등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집니다. 따라서 아동, 치매질환자에 대한 지문 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타당합니다.

평등원칙에 부합하므로 아동, 치매질환자에 대한 지문 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타당합니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입니다. 개인은 누구나 안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동이나 치매질환자의 보호자 등이 지문사전등록을 알아 미리 대비한 경우에는 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등의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자유를 다르게 보호받게 되는 셈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합니다. 지문 등을 사전등록 의무화하면 이를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치매질환자에 대한 지문 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타당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안전이 더 중요한 가치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지문 등을 등록하도록 하여 국가가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공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의 감시·통제와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는 등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해커스 **김종수** 로스쿨 면접 200주제

Part 3

심화 시사이슈

- Chapter 01 | 경제·산업정책
- Chapter 02 | 지식·정보정책
- Chapter 03 | 복지정책
- Chapter 04 | 기업·노동정책
- Chapter 05 | 소비자정책
- Chapter 06 | 환경정책
- Chapter 07 | 부동산정책
- Chapter 08 | 의료·보건정책
- Chapter 09 | 교육정책
- Chapter 10 | 국방·외교정책
- Chapter 11 | 사법정책
- Chapter 12 | 시사이슈



1. 기본 개념

(1) 초(超) 스피드로 인구 고령화 사회에 진입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고령화 사회를 “15~64세의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년 인구 비율(전체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즉 노년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그 두 배인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highly aged society)’라고 정의한다.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다음의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르다.

<표>: 고령화 진전의 국제 비교¹⁷⁾

구분	도달연도			증가 소요 연수	
	7%	14%	20%	7% → 14%	14% → 20%
한국	2000	2019	2026	19	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독일	1932	1972	2012	40	40
영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국	1942	2013	2028	71	15

비교적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일본의 경우도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4년 만인 1994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우리는 겨우 19년 만에 그러한 수준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고령화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인구 전환 때문이다. ‘다산다사(多産多死)’로부터 ‘다산소사(多産小死)’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총 인구의 평균 연령은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해 ‘다산소사’에서 ‘소산소사(小産小死)’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부모 세대의 인구가 자녀 세대의 인구보다 많아지므로 총인구의 평균 연령은 상승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사회가 근대화를 달성하고 인구 전환을 경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 원인도 역시 인구 전환에 의한 것으로 출산 자녀 수의 감소가 그 원인이다. 이는 네덜란드의 인구학자 반 드 카(Van de Kaa)가 말한 ‘제2의 인구 전환’, 즉 만혼화(晩婚化), 비혼화(非婚化)로 인한 출산율의 급격한 축소 때문이다.

¹⁷⁾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 자료집>(2000),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보도자료>(2001)에서 재인용

(2)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고령층은 젊은 생산 계층에 비해 소비 계층이므로 고령화가 진전되면 저축률이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초래되어 경제 성장률이 감소된다. 또한 연금 재정의 악화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급자의 급여 인하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소비의 감소 경향은 다시 경제 성장을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곧바로 경제 악순환 구조를 야기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저축률 저하와 노동력 부족으로 말미암은 경제 성장률 저하 및 연금 재정의 악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요도 감소하므로 저축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저축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둘째, 고령자 및 여성 인구 등에 대한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육아 시설을 확충하는 등 유휴 노동력을 풀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그들의 노동력 활용률을 높여갈 수 있다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악화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최근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36년에 적자 전환, 2047년에 연금 재정의 완전 고갈이 예상된다. 그간의 '저(低)부담, 고(高)급여'가 가져온 결과이다. 이에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고부담, 저급여'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려 하지만, 과연 그 같은 개혁안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넷째, 기존의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임금 지불 형태인 '연공급 제도'에 입각한 기업의 고용 관행이 변화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감속되면 그간의 안정적 고정 고용 관행이 유연적 고용 관행으로 전환될 것이다.

결국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여부는 그 사회의 변혁 가능성, 즉 각종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사회보장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 가령 고령자 의료 서비스 문제 개선이라든가 연금 재정 악화의 주원인인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한 정부적 차원의 대안 개발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은 공공 부문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개별 민간 차원에서의 접근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읽기 자료



고령화와 노인복지



고령화와 노인빈곤



111 문제

고령화와 노인문제

🕒 답변 준비 시간 10분 | 답변 시간 10분

※ 다음 QR코드를 촬영하면 연결되는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초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예정이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을 의미한다.



노인문제

- Q1.**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고령화 대책을 제시하시오.
- Q2.** 일본의 경우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문제가 곧 찾아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노인빈곤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제시하시오.
- Q3.** 노인빈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Q1. 모범답변

고령화 사회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줄어들어 국가의 수입이 감소합니다. 고령층은 소비 계층이기 때문에 생산 계층인 젊은이들에 비해 저축률이 낮고, 고령층이 많아지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감소됩니다. 또 연금 생활자가 많아 연금 재정이 악화되어 현세대의 보험료 인상, 연금 수급자의 급여 인하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금 소비의 감소 경향으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낮아져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노인부양비용과 국민연금 지출,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지출은 증가하나 세수는 감소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경기 침체, 국가재정적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령화 대책으로서, 정년 연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국가의 세수도 늘고 연금수혜자가 감소하므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혜자를 8% 줄이면 고령화가 국민생산 대비 공적 부채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¹⁸ 현재의 정년 연령은 평균수명이 현재보다 적고 의료체계가 빈약해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과거 시대에 정해진 것입니다. 이를 현재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노인복지가 빈약해 정년이 빠를 경우 늘어난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노인들의 빈곤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연령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진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시점과 공무원의 퇴직연령을 늦추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에는 퇴직연령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퇴직연령을 늦추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임금피크제, 고연령 노동자가 일하기 위한 환경 만들기 지원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고령자 비율의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Q2. 모범답변

노인빈곤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파산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노인세대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노인세대의 의료비와 요양비, 생활비는 결국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젊은 세대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가족이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사회적 가치의 붕괴나 훼손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노인빈곤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파산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노인은 짐이 된다'는 의식이 퍼질 수 있고, 오래 산 노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인식의 변화는 생명 윤리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젊은 층의 소비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자신의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고자 필사적으로 저축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젊은 층에서 이른바 달관(사토리)세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혼이나 연애, 소비 등에도 관심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노인빈곤상태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소비욕구 등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므로 젊은 층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¹⁸ 안주현·홍성현, <인구의 고령화-경제현안과 도전받는 정책>

마지막으로, 저출산의 가속화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육아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육아에 사용된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다는 전통사회의 가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육아, 양육,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노후 자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과 육아, 노후 대비를 개인의 전적인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안정적 생존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노인 빈곤은 저출산 문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Q3. 모범답변

먼저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이 부양할 것을 전제로 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가족기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일반화되었고 1인 가구도 많습니다. 가족의 부양을 전제로 최소한의 생활에 맞춰 설계된 연금으로는 노인빈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의료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의료기관 역시 가족의 도움을 전제로 설계되어 간병인 등을 두어 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보호는 가족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의료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 없는 병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질환의 초기 진단과 초기 치료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거복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태를 볼 때, 소득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입원이 끊어진 노인세대의 경우 주거비의 비중이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세대를 위한 공공주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노인세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공공주택 정책과 연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정책 또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정책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별복지의 경우, 지원자격과 조건을 스스로 알아봐야 하고 이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세대는 이러한 정보 습득이 어려워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큼니다. 따라서 보편복지의 형태로 복지정책을 전환하여 누구나 어려움 없이 복지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¹⁹⁾

19) ① 고령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② 고령자의 생활 안정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③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④ 지역 자원 활용과 안정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어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⑤ 고령자가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생활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⑥ 은퇴 이전에 시작하는 '인생 90세 시대' 준비와 함께 노년기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현역 시절에 축적해 온 자산을 활용한 노년기 생활 준비와 남은 재산이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일본내각회의, <고령 사회 대책 대강>, 2012.9.7. 개정판)



1. 기본 개념

(1)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혹은 용의자의 고민 모형은 경찰에 체포된 두 피의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을 A와 B라 하자. 경찰은 현재 이 두 사람이 1년씩 징역형을 받을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보다 심각한 은행 강도 행위를 했다는 심증은 있으나, 확실한 물증은 없다고 하자. 경찰은 A와 B를 분리된 방에 감금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지금 당장 우리는 너를 1년간 형무소에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너희 둘이 은행 강도라는 것을 자백하고 다른 방에 있는 네 친구를 주범이라고 증언하면, 너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석방되고, 네 친구는 혼자 20년 형을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 둘 모두 자백을 하면 공범으로 8년씩을 살 것이다.”

A와 B가 치사한 은행 강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들이 자백을 할까, 끝까지 범행을 부인할까? 두 용의자는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을 형량은 자기의 선택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도 달려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A의 선택을 생각해 보자. 그는 속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B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다. 만약 그 친구가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나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바로 석방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친구가 자백을 한다면, 그래도 역시 나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20년보다는 8년 형을 사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B가 어떻게 하든지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B 역시 A와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다.

A와 B는 각각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판단하여 둘 다 자백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A와 B가 자백을 선택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떠한 선택에도 자백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합리성이 사회적인 합리성과 동일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2) 공공재와 공유재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어 무임승차(Free-riding)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무임승차의 문제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편익만 보려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어두운 길거리에 가로등이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편리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사비를 들여 가로등을 세우지 않고 가로등 서비스를 누리고 싶어 하기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치안이나 국방과 같은 국가 행정 서비스 등을 들 수 있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브라질의 아마존 개발을 막으려 하는 많은 국가들의 경우를 볼 수 있다.

먼저 배제성이란 한 상품이나 재화,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펜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골목길을 밝히고 있는 가로등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은 자라 하여 가로등 불빛을 볼 수 없도록 할 수는 없다. 이처럼 배제성은 공유와 사유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경합성이란 상품이나 재화 등을 누군가가 먼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이른바 영합 (Zero-sum) 상황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호수가 있다고 하자. 호수는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공유자원으로 배제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호수의 물고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 물고기의 수는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A라는 어부가 먼저 물고기를 잡으면 그만큼 호수의 물고기는 줄어든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적으로 소비하게 되므로 이를 경합성이 있다고 한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어 타인의 소비를 막을 수 없고 그 소비를 두고 경쟁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개인은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 무임승차를 선택한다. 결국 개인적 합리성의 결과가 사회적 합리성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과소공급문제는 국가가 규제하는 방법이 해결방법으로 제시된다. 즉, 국가가 세금을 걷음으로써 무임승차하려는 개인들의 합리적 의사선택을 강제하여 사회적 합리성을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국가, 소극국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세금이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야경국가의 대표적 국가 서비스는 치안과 국방으로 나타난다.

공공재의 무임승차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위에서 제시한 브라질의 아마존 개발을 다시 살펴보자. 아마존은 '자구의 허파'라 불리고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마존은 개발되지 않는 것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 그러나 아마존을 개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편익은 전 지구로 나누어지는 데 반하여, 아마존을 개발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브라질에서만 발생한다. 브라질은 아마존을 개발하려 하고, 다른 국가들은 비용 부담 없이 아마존을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환경문제는 편익과 비용을 일률적으로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 문제가 크다.

(3)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생태학자인 G. 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다. 공유지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재화를 보통 공유재라 한다. 특히 공유재의 경우 비용/편익의 문제가 있다. 호수의 물고기를 예로 들면, 호수의 물고기를 잡게 되면 그 편익은 전부 어부에게 귀속되나 비용은 사회 전체가 지게 된다. 개인은 사회 전체가 지게 되는 비용은 적다고 인식하는 반면 편익은 크게 인식한다. 따라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 남용, 고갈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유지의 경우 개인이 자신의 편익에 비해 사회적으로 나누어지는 비용을 낮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유지를 사유화하여 비용을 개인에게 귀착되도록 하는 방법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시작된 인클로저 운동이다. 영국은 전근대 시기에는 양모가 있어도 생산능력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 공동 방목지에서 양을 키웠다. 그러나 산업혁명 시기에 옷감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계는 준비가 되었으나 원료가 되는 양털, 즉 양모(羊毛)가 부족했다. 양모가 희소해지자 양모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마을 공동 방목지에 양을 더 많이 집어넣어 키우기 시작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양을 키워 얻는 이익은 모두 자기 것인 반면, 양을 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인 목초지의 황폐화는 마을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목초지가 황폐화되어 모든 양이 굶어 죽어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결국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목초지에 개인별로 울타리를 쳐서 사적 소유화하여 이익과 비용을 일치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2. 쟁점과 논거

찬성론: 환경 보호	반대론: 산업경쟁력 저하
[환경 보호] 환경은 우리 삶의 터전으로 전 세계,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의 과다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여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환경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권 구매 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약화]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는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비용을 기업에 지운다. 기업의 비용 증가로 기업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된다. 격화되는 산업경쟁에서 비용 증가는 산업 도태로 이어진다.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로 인해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국민 보호]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전 지구적 환경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대형 태풍, 대규모 가뭄, 외래곤충 이상 증식 등이 있다. 국민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환경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고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국민생활 안정] 제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큰데,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로 인해 제조업 산업기반이 약화되면 이 분야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 고용의 감소는 국민의 생활 안정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제조업 고용은 소득하위계층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자기책임의 원칙] 자유 행사에는 책임이 따른다. 산업계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에너지 사용에는 온실가스배출이 수반되는데 시장 내부에서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외부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에너지 사용의 이익은 기업이 갖고,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	[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우리나라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은 이미 높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률을 결정하여 산업계는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는 온실가스 저감에 이미 노력을 기울인 산업계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읽기 자료



탄소배출권 거래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도킨스	협력(함구)	배신(자백)
	굴드		
	협력(함구)	굴드 1년 형, 도킨스 1년 형	굴드 10년 형, 도킨스 풀려남
	배신(자백)	굴드 풀려남, 도킨스 10년 형	굴드 3년 형, 도킨스 3년 형

- 트리버즈: 가령 도킨스와 굴드가 용의자라고 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이 둘이 모두 협력하여 상대방이 범인이 아니라고 자백한다면 둘 모두 1년 형을 받습니다. 반면 둘 다 배신하면 둘 다 3년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킨스가 협력을 하고 굴드가 배신을 하면 도킨스는 10년 형을 받고, 도킨스만 배신을 하면 도킨스만 풀려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킨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 사회자: 굴드가 협력하는 경우에는 도킨스가 배신을 하면 도킨스에게 가장 유리하고(풀려남), 굴드가 배신을 하는 경우에도 도킨스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은 배신을 하는 것(3년 형 < 10년 형)이겠죠.
 - 트리버즈: 계산이 빠르시네요.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킨스의 최선은 무조건 배신하는 전략이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만일 두 용의자가 모두 협력을 했다면 1년 형을 살았을 텐데, 논리적으로는 두 용의자가 모두 배신하는 것이 각자에게 제일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배신을 선택하고 3년 형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 (나)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개별 기업에 매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되 할당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만일 할당량을 넘어선 기업이 배출권을 살 수 없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525개 기업에 온실가스배출 할당량을 통보했다.
- (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동의하였다.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는 일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자발적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의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장기 목표를 갖고 있다.
-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감축목표라기보다 증가목표라고 비판하고 있다.

- Q1.**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 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의 제시문의 죄수의 딜레마를 사용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기 어려운 이유를 논증하시오.
- Q2.**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할 방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 Q3.** (나)의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효과가 있겠는가?
- Q4.** (나)의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는 온실가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공동체주의자인 샌델은 이에 대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거래하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 Q5.** (나)의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에 대한 샌델의 비판을 받아들인다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 Q6.** (다)에서 우리나라가 목표를 낮춰 잡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추가질문

- Q7.** (다)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11%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국제탄소시장에서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예측하시오.
- Q8.**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화력발전이나 천연가스발전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 Q9.**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한 이유를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Q1. 모범답변**

위의 죄수의 딜레마에 따르면, 굴드와 도킨스는 각각 협력을 선택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어 각각 배신을 선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구성원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 공동체에는 손해가 되는 경우를 공유지의 비극이라 합니다.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이익은 일국가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에 비해 온실가스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 세계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국가로서는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계산했을 때 순이익이 더 큰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온실가스배출로 이익과 비용은 오히려 비용 측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로서는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지 않고자 하는 유인이 큼니다. 따라서 각국이 온실가스배출을 스스로 억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Q2. 모범답변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할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가 온실가스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국제사회의 문제이므로 개별 국가가 일괄적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없으므로 국제협약을 통해 이를 강제합니다. 예로써 교토 의정서와 파리협약이 바로 이를 규정하고 강제하는 국제규약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적으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자발적 거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실가스거래소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성을 바탕으로 하여 인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인류공동체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을 타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자전거나 걷는 것이 있습니다.

Q3. 모범답변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 보호는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환경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큼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와 재해·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 시 부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발생이 더 늘어난다면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의 삶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규제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규제는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 없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온실가스 규제는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대체에너지 사용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규제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를 시행하면 온실가스배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배출 자체를 규제할 경우, 경제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를 시행할 경우,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제도가 시행되면 온실가스배출을 가장 적게 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온실가스배출 저감분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배출 저감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배출 저감기술을 개발하도록 강제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Q4. 모범답변

환경 보호는 인류공동체가 모두 함께 지켜나가는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고 지구 온난화를 모두 함께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는 돈을 지불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국가나 기업은 굳이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손쉽게 돈으로 사려 할 것이며, 이 행위는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류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 보호를 위해 모든 인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연대성은 약해지고 누구나 손쉽게 돈을 주고 이 가치를 살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라는 인류공동체적 가치는 돈과 손쉽게 교환되는 가치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Q5. 모범답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 소비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제도는 현재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배출 저감기술을 가진 기업은 선진국의 기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진국의 기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탄소저감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배출권을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에 팔아 얻은 이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반면 현재 기술력이 모자란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은 현재의 비용에 온실가스배출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기술개발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의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현세대의 것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구환경 보호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후손들까지 포함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면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대성을 발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과도한 냉난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6. 모범답변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구조가 화석연료 사용에 맞춰져 있고 경제 기반도 중화학공업과 자동차 등 화석연료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려면 경제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제 위축이 예상됩니다.

Q7. 모범답변

먼저, 전 세계로부터 감축 의지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토 의정서와 파리협정에 가입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려 애썼는데, OECD 가입국으로 유리할 때에는 선진국의 지위를 불리할 때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로, 국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탄소시장의 거래량이 그리 크지 않으나, 파리협정에 따라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국제사회 공동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을 받을 즈음이 되면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공급에 비해 수요가 급증하여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축 노력 자체를 하지 않고 11%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사들인다고 이미 공개해버린 상황이므로 여분의 탄소배출권을 가진 국가나 기업이 이를 예상하고 수급을 조절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에너지 경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소극적이 되어 국가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사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여차피 다가올 미래라면 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목표가 소극적일 경우 기업으로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린다거나 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적어집니다. 그 결과 국제적 산업 구조 개편에서 뒤처져 국가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Q8. 모범답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목적은 인류의 생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지구의 에너지 순환이 깨져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 인류의 생존이 위태로워집니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소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스리마일섬 사건,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 일본의 후쿠시마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력발전소는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됩니다. 위협을 막기 위해 다른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사용비중을 늘려나가고,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유도하며,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자발적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야 합니다.

Q9. 모범답변

최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홀로 배신을 선택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과 중진국이 모두 힘을 합쳐 온실가스배출을 줄인다면, 개별 국가인 미국은 이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선택이 됩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감수하고 있을 때,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싼 가격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경제 성장의 과실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선택을 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정당한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1. 기본 개념

(1) 의대 정원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시 정부는 의료계 파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수용했다. 그 결과 2000년의 3,500명에서 2007년 3,058명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2) 의사 인력 부족 현황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 3.5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해서 2.3명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의 65%에 불과하다. 이는 의대 정원이 오히려 축소된 반면, 지난 20여 년간 의료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해마다 의사 인력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발생한 결과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면허 보유자 수는 OECD 평균 4.8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해 2.8명이고,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2.0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57% 수준이다.

직종별 소득수준 비교에서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의사 소득의 비는 OECD 국가의 경우 대체로 2~3배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6배 정도로 조사되었다.

(3)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의사 인력이 총량적으로 부족해 지역별 수급 불균형 격차가 심화되어 의료 취약지가 확대되고 있다.

병원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대형 병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의 인턴과 전공의에 대한 인력 수요는 매년 4천 명을 초과하는데, 의대 졸업자 수는 3천여 명에 불과해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의료계는 이를 이유로 전공과목별 수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사 인력의 공급 부족에 따른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대 문제로 이어진다.

의료산업 성장으로 인해 연구개발 등 비임상 분야의 의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 인력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임상 분야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 의사가 부족하게 되어 공공 의료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인구고령화 등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적 수요 전망을 고려할 때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2. 원기 자료



의사 인력 정책대안



의사 인력 확충 정책



공공의대



143 문제

의대 정원 확대

🕒 답변 준비 시간 15분 | 답변 시간 10분

※ 다음 QR코드를 촬영하면 연결되는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루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 1,000명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의료공백과 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해소 대책 촉구

- Q1.**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논변하시오.
- Q2.**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논변하시오.
- Q3.**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Q1. 모범답변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국민보건 실현과 지역불균형의 해소를 논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국민보건을 실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은 모든 자유와 권리 실현의 전제가 되는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위해 국가에 국민보건을 실현할 것을 위임하여 이를 보장받고자 합니다. 특히 의료는 의료전문성으로 인해 일반 국민과 의료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의료인의 면허 발급과 교육과정, 인력 수급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인의 절대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층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인 수급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면허의사 수는 OECD 평균의 58.3%,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5.7%,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의 5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연간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의료 수요는 많아지는 것에 비해 의대 정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소아과 오픈런이나 지역주민의 서울 병원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분야에 해당하는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목 의료인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이 실현되기 어렵고 앞으로의 의료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의료 면허의 발급과 관리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의료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의료인의 지역적 편재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 의료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중증 질환 환자의 경우 서울 주민의 90%는 서울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경북 지역주민은 단 20%만 경북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진료환자에 비해 영월 지역의 진료환자는 예상치 못한 사망 비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러한 의료 격차로 인해 수도권 거주주민과 지방 거주주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이 평등한 의료 접근권을 통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의료인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인력이 증가할 것이고,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의료 종사의무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조건을 두어 지역의대를 설립하게 되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Q2. 모범답변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국민보건 저해와 지방의료불균형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국민보건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국민보건의 증진이며, 이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인 필수의료분야 의료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당면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인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고 의료를 시행하여 의료의 공공성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학이나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의 필수의료분야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보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분야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이 늘어나야 국민보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의료인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이 적은 이유는 의료 수가가 낮아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것보다 안과나 피부과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아과 진료에서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우 성인보다 적은 양을 사용해야 하고 수가 역시 적은 분량을 사용한 것에 한정하여 책정됩니다. 그러나 주사제는 성인용으로 판매되고 한번 사용된 주사제는 아무리 많은 양이 남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하여 성인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는 소아과 진료의와 소아과 병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필수의료분야의 의료 수가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여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수급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장래 의료 시스템 자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의료문제는 의료 수가와 같은 보건복지정책과 의료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여 해결할 일이지,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료불균형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료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 면허 보유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의료인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인력 부족과 지방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부터 간호대학 정원을 늘렸고, 그 결과 현재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에 도달했습니다. 간호사 면허 보유자는 많아졌으나, 간호사 인력의 부족문제와 지방의료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를 볼 때 간호사 면허 보유자의 수 증가보다 간호사의 고용과 지방 정주 여건의 개선이 의료불균형 해결의 결정적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 인프라 등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린다고 하여 지방의료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지방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의료 수요가 이들을 끌어당길 것이고, 의무적으로 지방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Q3. 모범답변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보건의 실현과 지방의료불균형의 해소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보건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료 수가의 조정, 지방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시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를 함께 도입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료인의 지역 편재 문제를 겪은 일본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 소재의 의과대학에서 별도 정원으로 지역의료에 뜻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의사가 부족한 특정 진료과를 선택해 특정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의무사항하며 근무지를 지자체가 배정합니다. 그리고 의무기간동안 의사로서 일하면 장학금 반환을 면제하며, 계약 파기 시 장학금 전액을 일시불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보건의 균형적 실현이 가능하므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해커스 김중수 로스쿨 면접 200주제

Part 4

면접 모의문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사행산업이란, 우연에 의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사행산업을 7개 업종으로 정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독하고 있다. 이 7개 사행 산업은 카지노(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와 외국인 대상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 토토, 소싸움이며, 매년 매출 총량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목표비율로 규제하고 있다.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국가가 불허하는 사행성 산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불법도박으로 보아 처벌의 대상이 된다.

- Q1.** 국가가 사행성 산업을 주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의 핵심논거를 제시하여 논하시오.
- Q2.** 국가가 사행성 산업을 주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입장의 핵심논거를 제시하여 논하시오.
- Q3.** 국가가 사행성 산업을 주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 중 자신의 견해를 정하고 새로운 논거를 들어 논하시오. 그리고 자신의 견해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재반론하시오.



추가질문

- Q4.** 로또 당첨금 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Q5.** 연금복권제도는 타당한가?
- Q6.**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는 현재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그런데 새만금 개발, 부산항 재개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내국인 카지노 추가허용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해커스 김중수 로스쿨 면접 200주제

Part 5

면접 모의문제 해설



Q1. 모범답변

국가의 사행성 산업 주관을 반대하는 입장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핵심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행성 산업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복추구의 실현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준다면 제한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행복 추구의 실현이 타인이나 사회가 보기에 현명하지 않거나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복권, 경마, 경정, 카지노 등과 같이 사행성 도박이 특정한 개인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의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행성 도박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준다면 제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행성 도박은 당사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의 금전적 손해는 자신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며,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욕의 저해는 그러한 우려에 불과하며 타인에 대한 직접적 해악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행성 산업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Q2. 모범답변

국가의 사행성 산업 주관을 찬성하는 입장은 도박 중독의 예방이라는 핵심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사행성 산업을 주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가는 사회적 가치의 훼손을 막아야 할 공동체적 의무가 있습니다. 도박 등의 사행성 산업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개인의 합리적 판단능력을 저해하여 중독에 빠뜨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행성을 최대한 자극하여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고, 도박 등의 사행성 산업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도박 중독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건전한 근로의욕은 훼손될 것이고 개인은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사를 위임받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정도의 사행성 산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일일 구매량이나 이용시간을 통제하는 등으로 건전한 근로의욕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고, 사행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의 합리적 판단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행산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사행산업 7개 업종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 토트, 소싸움을 정해 매년 매출 총량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목표비율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달성하면서도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사행성 산업을 주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3. 모범답변

국가가 사행성 산업을 주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는 도박 중독의 예방에 더불어, 개인의 진정한 의사 실현이라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사행성 산업은 우연에 의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개인은 도박을 선택함으로써 여가를 선택하고 일종의 오락으로 즐기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행성 산업의 운영주체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인 개인이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극소수의 특정상황에서는 개인이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산업 전체의 규모와 확률을 파악한다면 사행성 산업의 운영주체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자 개개인도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미미한 이익과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인간 심리상 손실을 혐오하기 때문에 본전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도박에 중독될 수밖에 없고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지며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개인은 여가 선택을 하고 싶을 뿐, 자신의 생업을 잃고 재산을 탕진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행성 산업의 특성상 여가 선택의 시작이 미끄러운 경사면을 굴러가 재산의 탕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사행성 산업을 주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복권 등 사행성 산업을 주관함으로써 오히려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의 기금 마련이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사행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인다면 사행성 산업의 국가 주관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시문 (나)의 연금복권은 영리목적에 의한 발행이 금지되어 있고, 소위 ‘한탕주의’라는 사행성을 줄이기 위해 당첨금 지급을 연금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인당 한도금액 설정, 청소년 구매를 금지하는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행심 조장을 일정정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택을 돕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론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Q4. 모범답변

로또 당첨금 상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사행심 조장이 자극되고 건전한 근로의욕이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Q5. 모범답변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연금복권제도는 타당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원이 되는 세금은 한정적 자원으로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의 현실상 국방비 지출이 많아 복지나 공익적 목적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큼니다. 따라서 복권 사업을 통해 공익적 목적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복지 향상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권은 판매금액의 40% 이상이 복권 기금으로 적립되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명시된 공익적 목적,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복권제도는 타당합니다.

Q6. 모범답변

내국인 카지노 추가허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과도한 도박 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다가 황금만능주의로 인한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은 2023년 기준으로 1.3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2,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강원랜드 고위험 고액군이 2018년 1548명에서 2019년 1604명으로, 도박 중독 고액군이 같은 기간 6769명에서 709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박 중독을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인의 사행성 추구를 일정정도 인정해줄 필요는 있으나, 이는 강원랜드 하나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PLUS+ 사행산업

1. 읽기 자료: 관련 신문기사



연간 카지노 이용객

2. 읽기 자료: 논문



사행산업정책의
변화과정



사행행위의
규제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Part 6

면접 기출문제 & 해설 (2025~2019)

강원대 로스쿨 (2025~2019)	영남대 로스쿨 (2025~2019)
건국대 로스쿨 (2025~2019)	원광대 로스쿨 (2025~2019)
경북대 로스쿨 (2025~2019)	이화여대 로스쿨 (2025~2019)
경희대 로스쿨 (2025~2019)	인하대 로스쿨 (2025~2019)
고려대 로스쿨 (2025~2019)	전남대 로스쿨 (2025~2019)
동아대 로스쿨 (2025~2019)	전북대 로스쿨 (2025~2019)
부산대 로스쿨 (2025~2019)	제주대 로스쿨 (2025~2019)
서강대 로스쿨 (2025~2019)	중앙대 로스쿨 (2025~2019)
서울대 로스쿨 (2025~2019)	충남대 로스쿨 (2025~2019)
서울시립대 로스쿨 (2025~2019)	충북대 로스쿨 (2025~2019)
성균관대 로스쿨 (2025~2019)	한국외대 로스쿨 (2025~2019)
아주대 로스쿨 (2025~2019)	한양대 로스쿨 (2025~2019)
연세대 로스쿨 (2025~2019)	

서울대 로스쿨 (2025~2019)

* 문제에 대한 해설은 p.29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문제

① 교수:학생 = 3:1 ② 면접 준비 20분, 면접 시간 15분 ③ 메모 허용 ④ 추가질문 있음

메모 및 휴대 여부	메모 및 휴대 가능함
대기실 특징	대기실 입실 후 겹옷을 제외한 모든 개인물품을 모두 앞으로 제출하도록 함. 개인적으로 준비한 간식이나 물도 이용할 수 없음. 대기실에 비치해둔 물과 핫팩만 이용 가능함. 화장실 이용은 남녀 1명씩 순서대로 갈 수 있음
문제풀이실 특징	문제풀이실은 복도에서 준비하며, 작은 글씨로 2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며 파일 안에 들어있음. 파일이 양 옆으로 잘 퍼지지 않음. 메모지는 A5 용지 2장으로, 총 3면을 사용가능한데 첫 장은 앞면과 뒷면, 두 번째 장은 앞면만 사용 가능함. 스테플러로 두 장이 묶여 있고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받음. 메모지에는 공책처럼 줄이 그어져 있고 줄 간격이 아주 넓음
면접고사장 특징	면접실 안에도 제시문이 파일 안에 들어 있는 상태로 비치되어 있음. 면접관과의 거리는 1-2m 정도로 가까움. 종료 1분 전에 밖에서 노크를 하며, 제한시간 15분이 되면 발언을 중단하고 퇴실함
기타 특이사항	면접 종료 후에 사용한 메모지를 반납하며, 정해진 출입구로 곧바로 퇴실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됨

2025 서울 A 문제

※ [가군 오전]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1>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은 시민인 자와 시민이 아닌 자를 구분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였다. 시민은 참정의 권리로 특징지어지고, 이러한 참정의 권리는 파레스시아(Parrhesia)를 통해 실현되었다. 파레스시아는 ‘모든’을 뜻하는 pan과 ‘말’을 뜻하는 rhesis의 결합어이다. 여기서 ‘모든’은 ‘모든 것’을 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모두가’ 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파레스시아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공동체의 유지와 안정을 특정한 부류의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루어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파레스시아는 민회 등을 통해 실현되며 그리스 민주주의를 지탱하였다.

<제시문 2>

허위인 것 역시 진실에 도움이 된다. 진실을 모르고 있던 경우 진실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허위인 것이 진실과 경합하며 진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한계도 있다. 일단, 거짓말의 경우에는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정치인이 선거에서 국민들을 속이는 경우나, 허위로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은 진실에 다가가는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집중력과 시간의 제한 역시 한계가 된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 것인지를 대조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쏟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반향실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 모이게 된다.

<제시문 3>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매스미디어 시대의 삶의 특징을 잡담, 호기심, 애매성으로 표현했다. 잡담 속에서 “모든 근원적인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미 오래 전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다듬어진다.” 어떻게 광고하나에 따라 급히 쓰인 책도 훌륭한 책이 되고, 오랜 성찰이 담긴 책도 평범한 책이 된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진실한 앞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철학의 적이다.

<제시문 4> 유발 하라리, <넥서스>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은 정보를 진실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보는 진실과 딱히 관련이 없다. 정보가 역사에서 하는 역할은 실존하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보가 하는 일은 별개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연인이든 제국이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보의 결정적인 특징은 재현이 아니라 연결이며, 따라서 정보란 서로 다른 지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무언가다. 정보가 꼭 어떤 것들에 대해 무언가를 알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보는 서로 다른 것들을 무언가로 묶는 역할을 한다. 별자리 운세는 연인을 별점으로 묶고, 선전 방송은 유권자를 정치적으로 묶고, 군가는 병사들을 군사 대형으로 묶는다.



A학생 추가질문

- Q1-1. 네 개의 제시문을 관통하는 공통주제를 말해보시오.
- Q1-2. 제시문을 특정해서 요약하지 말고, 전체를 관통하는 이유를 설명해보면?
- Q2-1. 그럼 진리와 말하기에 관한 태도가 유사한 제시문을 두 가지씩 묶어볼 수 있겠나?
- Q2-2. <제시문 2>에서 거짓말은 <제시문 3>에서의 매스미디어와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묶은 것인가?
- Q3. <제시문 3>에서 매스미디어가 선거에 관한 가짜뉴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Q4. <제시문 3>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매스미디어의 본질은 진리 추구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Q5. <제시문 4>에서 ‘순진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Q6. <제시문 4>는 ‘순진하다’와 대비하여 자기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부르겠는가?
- Q7. <제시문 4>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 Q8. 매스미디어의 속보는 빠른 전달을 추구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정보 생산의 속도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B학생 추가질문

- Q1. 4개의 제시문을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 Q2. 제시문을 분류하시오.
- Q3. <제시문 1>에서 ‘누구나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사회에 왜 필요한가?
- Q4. 표현의 자유에 <제시문 2>의 정치인의 거짓말도 해당되는가?

- Q5.** <제시문 2>에서 말한 거짓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 Q6.** 시민사회 내부의 자정작용으로 <제시문 2>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 Q7.** <제시문 3>의 매스미디어가 철학의 적이라고 말했는데 제시문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을 말하십시오.
- Q8.** <제시문 4>에서 정보가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연결이라면 진실성은 오늘날 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 Q9.** <제시문 4>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2025 서울 B 문제

※ [가군 오후]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제시문 1> 엠마 메리어트, <만들어진 세계사(나쁜 세계사)>

역사적 사건들이란 사실 신화와 전설, 오보와 거짓말, 과장과 각색, 그리고 엄청난 혼란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시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한 것이 역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실’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학교나 미디어 등에서 주입시킨 사실일 뿐 실제 일어났던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오해하게 된 이유는 매우 많다. 역사적 증거나 기록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증거물이 신뢰할 수 없거나 서로 모순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어느 사건을 놓고 목격자 여럿에게 사건의 실체를 물어보면 모두에게 다른 대답을 듣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놓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란 쉽지 않고, 아예 사건의 해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과거 사건에 대해 전후 맥락을 생략하고 사건 하나만을 들여다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무리 과거의 입장에서 관찰하려고 해도 현대적 감각에서 사건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해석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고 싶은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를 개척했다는 영국의 세실 로즈는 한때 대영제국 건설에 이바지한 인물로 추앙받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원주민을 학대하고 괴롭힌 제국주의자이며 무뢰한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사 역시 인생처럼 복잡 미묘하다. 그런데도 과거를 단순화하고 우리의 선입견에 맞도록 포장한다. 역사적 인물을 정해놓은 캐릭터에 맞춰 영웅 아니면 악인이라는 식으로 구분한다.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도 실제 있었던 인물이므로 당연히 우리처럼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었을 것이다. 역사를 신화화하는 것은 동화처럼 크게 해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신화가 정치적 무기로 쓰일 때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제시문 2> 유발 하라리, <넥서스>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수많은 일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했을 때, 유럽에서 손꼽히는 현인이었던 괴테는 ‘마법사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발표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마법사는 제자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명령하고 길을 나섰다. 스승이 없자 제자는 요령을 피웠다. 빗자루에 마법을 걸어 자기 대신 물을 길어오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제자는 빗자루를 멈추게 하는 마법까진 배우지 못했다. 빗자루는 끊임없이 물을 날랐고, 겁에 질린 제자는 빗자루를 두 개로 잘랐다. 하지만 두 개의 빗자루가 각각 물을 길어오면서 마을은 삽시간에 물바다가 됐다. 제자는 이 빗자루들을 통제할 수 없었고, 마법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후, 마법사가 돌아와 빗자루를 모두 멈추어 사태를 진정시켰다.

<제시문 3> 로레인 대스턴, <도덕을 왜 자연에서 찾는가?>

수 세기 동안, 철학자들은 자연에는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자연은 단순히 사실이며, 그 ‘사실’을 ‘당위’로 바꾸려는 인간 행위의 강요나 투영을 받아들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런 관점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까지, 자연적 질서의 사실에서 도덕적 질서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추론을 끌어낼 수 없다. 그러한 추론을 끌어내려 하는 것은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 오류는 문화적 가치가 자연으로 이전되고, 이 가치를 지지하도록 다시 자연의 권위를 소환하는 일종의 은밀한 밀수 작전과 같다. 이러한 종류의 가치 밀수는 종종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마치 중세 통치자들이 “정치체(body politic)”의 손과 발이 머리와 심장을 충실하게 섬기는 것에 근거해서, 인민 대다수를 귀족과 성직자에 종속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옹호했을 때처럼 말이다. 또는 20세기 초 여성들을 위한 고등교육을 반대한 사람들이 모든 여성의 천직은 아내와 엄마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인민의 종속성과 여성의 가정성은 ‘자연화’되었다.

<제시문 4> 린 헌트, <인권의 발명>

인간은 경계를 넘어 동일시가 가능하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서한 소설(서간체 소설)이 유행하였고 그 유행시기에 맞추어 인권의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증명할 수 있다. 전지적 시점으로 쓰인 소설과 달리 서한 소설은 모든 등장인물들이 편지를 통해 내면적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독자가 주인공을 실존 인물로 착각하거나 자신과 동일시하기 쉽다. 서한 소설의 전성시대는 인권의 탄생 시기와 일치한다. 서한소설이라는 장르는 1760년대부터 1780년대에 성행했으며, 상당히 의아하게도 1790년대에 종말을 고했다. 예를 들어, 서한 소설인 장 자크 루소의 <신 엘로이즈>의 영역(英譯)본은 불어판이 나온 지 두 달이 채 못 되어 출간되었으며, 1761년부터 1800년 사이에 10쇄나 찍혔다. 같은 기간에 불어판은 115쇄나 출간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자아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인권은 단순히 이념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경험에 의하여 뇌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것이다. 독서 경험은 공감을 통해 동일한 경험을 만들고 이는 인권을 낳았다. 새로운 독서는 새로운 개인적 경험인 공감을 창출했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관념인 인권을 낳았다.

 A학생 추가질문

Q1. 제시문을 간단하게 요약하시오.

Q1-1. 본인이 생각하는 자연주의 오류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Q2. <제시문 3>, <제시문 4> 중에 <제시문 1>과 연결(연관)되는 제시문은 무엇인가?

Q3. <제시문 1>에서 말하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며, <제시문 1>의 입장에 동의하는가?

Q3-1. <제시문 1>에 대한 반박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재반박할 수 있는가?

Q3-2. 그렇다면 <제시문 1>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그러한 평가와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Q4. <제시문 2>에 나오는 마법사는 어떤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가?

Q4-1. <제시문 2>의 문제는 마법사를 통해 극복되었는가?

Q5. <제시문 3>으로 넘어가서, <제시문 3>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Q5-1. <제시문 3>의 자연주의적 오류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는가?

Q5-2. 언급한 예시에서 자연의 법칙은 무엇인가?

Q5-3.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또는 인간도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는 존재로 보아서 자연 그대로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반박이 들어올 때, 이를 어떻게 재반박하겠는가?



B학생 추가질문

Q1. 제시문 전체를 관통하는 제목을 붙여보시오. 그리고 각 제시문을 2문장 내로 요약하시오.

Q2. <제시문 2>의 ‘마법사의 제자’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제시문 1>, <제시문 3> 혹은 <제시문 4>의 사례를 설명하거나 재해석하시오.

Q3. <제시문 1>에서 신화화된 역사가 정치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 사례를 들어보시오.

Q4. <제시문 2>의 마법사가 무엇인가? 현실에서 그러한 마법사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을 말해보시오.

Q5. <제시문 2>와 <제시문 3> 중에 <제시문 4>와 더 잘 겹치는 것은 무엇인가?

Q6. <제시문 1>의 관점에서 <제시문 3> 혹은 <제시문 4> 중 하나를 평가하시오.

Q7. <제시문 3>에 자연주의적 오류가 있는데 반대로 당위주의 오류를 말해주겠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인간은 차이가 없다. 이 당위주의 오류를 생각하면서 여성 징병제, 여성할당제 등을 평가해보시오.

Q8. <제시문 1>에서 역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Q9. <제시문 2>와 같이 인간은 혁신 기술을 최근 많이 마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또한, 혁신 기술을 제한해야 한다면 누가 제한해야 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Q9-1. 결국 누가 통제해야 되는 것인가?

2025 서울 C 문제

※ [특별전형]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약 0.7 페이지 분량)

소비(consume)는 과거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14세기 라틴어 sumere에서 파생된 영어 소비(consume)는 ‘낭비’, ‘파괴’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단어가 경제학에 포섭되며 중립적인 의미로 ‘소비’가 사용되기 시작한 18세기까지도 이러한 부정적 함의는 남아 있었다. 소비가 본래의 부정적 의미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이다.

대량 계획생산경제가 도입되고 생산과 소비를 예측하는 일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며, 오늘날의 소비는 제조업자와 광고 대행업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에 의해 소비가 세워지고 나면,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 그 단어에는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늘날의 소비는 또한 '낭비'를 부추긴다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부정적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제시문 2> (약 0.3 페이지 분량)

나는 '입원 환자 전문 의사'이다. 입원 환자 전문 의사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환자들과 어떠한 인간적 관계도 맺지 않고, 입원해 있는 환자를 기계적으로 치료할 뿐이다. 미국에는 수만 명의 입원 환자 전문의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입원 환자 전문의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일에 대한 합리적 대가를 얻기 위해서이다. 예전과 같이 환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하며, 그들이 퇴원해도 그들의 곁을 지켜줄 '주치의'는 이제는 없다. 병원 역시도 환자의 진료에 있어 효율성을 강조한다. 많은 후배 수련의들은 비웃음과 조롱까지도 겪으며 1차 진료의로서의 꿈을 접는다.

<제시문 3> (약 0.5 페이지 분량)

근대 무역은 제국주의의 발달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무역이 발달하며 각국의 식문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맞게 되었는데, 설탕은 이러한 근대 무역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유럽의 노동자 계급에게 설탕은 기존 커피, 차 등의 쓴 맛을 가릴 수 있는 저렴한 고칼로리 에너지원이었으나, 시드니 민츠의 <설탕과 권력>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설탕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해 주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아프리카 노예의 문제가 영국 내에서 주장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8세기 퀘이커교도들에 의해 노예제 폐지가 주장되기도 했으나, 영국 의회 내 의원들 중 상당수는 이미 노예제를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던 동인도회사 및 서인도회사 등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노예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방해하고자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영국 내에서 노예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에 걸쳐 영국 의회에 투서된 노예제 폐지 관련 서한만 500여 통에 이르렀을 정도이다.

<제시문 4> (약 0.5 페이지 분량)

첨단 빅테크 기업들에 관련한 윤리적 문제가 화제이다. 첨단 빅테크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코발트 등 수많은 자재들을 중개자들로부터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원자재 생산지의 광부들은 수많은 위협에 노출된다. 광산에서 발생하는 유독 물질들로 인해 폐병을 앓게 되기도 하고,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유통망의 하부에 있는 중개자일 뿐, 결코 첨단 빅테크 대기업들이 아니다.

최근 콩고 민주 공화국의 열네 가족이 첨단 빅테크 대기업을 상대로 코발트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단체 소송을 진행하였다. 코발트 광산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다 광산이 붕괴하여 전신마비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첨단 빅테크 대기업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모두 수행했으며, 자신들은 인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변론한다.



A학생 추가질문

- Q1.** 4개의 제시문은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다. 공통 주제가 무엇인가?
- Q2-1.** <제시문 1>에서, 왜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다고 하였는가?
- Q2-2.** 지원자는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하라.
- Q2-3.**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나? 결국 제조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좋은 제품을 알릴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Q3-1.** <제시문 2>에서 대립되는 두 모습의 의사가 드러난다. 의료 분야 밖에서 이와 같이 대립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예시를 한 가지 찾아 말하시오.
- Q3-2.**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의 차이 역시 앞선 제시문의 사례에 가깝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Q3-3.** <제시문 2>에서 환자를 금전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문제라 판단한 것 같은데, 주치의로서의 의사도 환자를 돈으로 보는 유혹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 Q4-1.** <제시문 3>과 <제시문 4>에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무역과 관련된 착취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착취에 대해 소비자들은, 또는 기업은 책임을 가지는가?
- Q4-2.** <제시문 3>에서 설탕을 먹는 사람들은, 꼭 기득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커피나 차의 쓴 맛을 지우거나 저렴하게 열량을 채우기 위해 이를 소비하던 노동자이기도 했다. 이들의 입장에서 케이크교도들이 오히려 ‘너희는 설탕을 먹지 말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존재는 아니었을까?



B학생 추가질문

- Q1.** 4개 제시문의 공통 주제는 무엇인가?
- Q2.** <제시문 4>가 소비와 연관되는 지점을 답하시오.
- Q3.**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 Q4.** <제시문 2>와 같은 예시를 들어보시오.
- Q5.** <제시문 2>의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문제점을 답하시오.
- Q6.** <제시문 3>과 <제시문 4>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답하시오.
- Q7.** 소비자의 선택은 항상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 Q8.** <제시문 4>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답하시오.
- Q9.** <제시문 1>의 부정적인 소비와 <제시문 3>의 케이크교도들이 주장하는 소비는 어떻게 다른가?

2024 문제

① 교수:학생 = 3:1 ② 면접 준비 20분, 면접 시간 15분 ③ 메모 허용 ④ 추가질문 있음

2024 서울 A 문제

※ [가군 오전] 다음 제시문을 읽고, 시험장에 입실 후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1>

가족 내에 순수한 공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관심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한 관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형상에 기초한 관심인데, 이는 반드시 행동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수반하며 평가를 요구한다. 이 관심은 중요한 차원의 것이 결여된 것이고, ‘순수한 시간’은 완전히 가려진다. 아이에게 “숙제했니?”, “방이 더러우니까 치워라” 등이 그 사례이다. 둘째는 형상을 초월한 관심이다. 이는 아이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관심이다. 형상을 초월한 관심은 ‘순수한 시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부모는 아이를 인간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존재로도 대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인간(형상에 기초한 관심)과 존재(형상을 초월한 관심)의 균형을 찾아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제시문 2>

멀티태스킹은 원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던 수렵사회의 동물들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 수많은 행위들에 복합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행동패턴이다. 당연하게도 이 시기 사람들은 깊은 사고를 하거나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이러한 행동패턴을 현대사회의 인간이 닮아가고 있는데, 멀티태스킹이 효율성을 올린다는 통념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좋은 삶보다 생존을 목적으로 여기게 되었고, 깊은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성에 기여하는 사색이 필요하다.

<제시문 3>

우리는 통념상, 보상을 주면 창조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리학 실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2년 심리학자들은 외부 자극이 어떻게 개인의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자 실험을 기획했다.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해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가벼운 과업이나, 해결을 위해서는 약간의 창조적 발상이 필요한 과업을 부여했다. 그리고 실험군을 ‘성과 해결에 따른 보상’을 예고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실험 결과 ‘예고된 보상’을 고지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과업수행을 위해 평균 3-4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음이 나타났다. ‘예고된 보상’이 인간 창조성의 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학계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에 외부 보상을 주는 것을 절대적인 명제로 여기고 현실의 기업들은 실험결과와 반대되는 기존 통념에 따라 기업을 관리한다.

<제시문 4>

자연관은 오랜 논쟁거리였다. 자연을 인간중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며 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한편, 생태중심적인 입장에서 자연 그 자체의 존재에서 의미를 찾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국가인 에콰도르는 2008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중심적 세계관으로의 변화 내용을 자국의 헌법에 포함시켰다. 에콰도르 헌법은 독립된 장으로 자연의 권리를 규정한다.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할 권리를 인정받는다. 파차마마는 안데스 원주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인 영적 존재로 어머니 대지로 번역된다.



자연의 권리

[에콰도르 헌법]

- 71조: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 72조: 자연환경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된 자연에 의지해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보상의무와는 별도로 자연 자체도 원상회복될 권리를 갖는다.
- 73조: 국가는 종의 절멸이나 생태계 훼손 또는 자연 순환의 영구적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 74조: 개인과 공동체, 인민과 민족은 환경으로부터 혜택과 좋은 삶의 방식의 향유를 가능케 하는 자연의 부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헌법 조문의 존재와는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자연 자원 채취 등 원주민의 건강과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에콰도르에서 자연은 헌법에 명시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A학생 추가질문

- Q1.** 제시문의 공통적인 주제를 설명하시오.
- Q2.** <제시문 1>의 부모-자식처럼 사랑에 기초한 관계 외에 형상에 기반한, 초월한 관심이 존재하는 관계의 사례가 있는가?
- Q3.** <제시문 1>의 필자는 <제시문 2>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Q4.** <제시문 3>의 필자는 경영 영역에서 인센티브 지급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Q5.** <제시문 1>에 기반하여 <제시문 4>를 설명하시오.



B학생 추가질문

- Q1. 제시문 각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 Q2.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제시문 1>과 <제시문 3>의 화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Q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왜 인센티브를 사용할까?
- Q4. <제시문 4>의 에콰도르 헌법에서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화적 전환으로 보이는가?
- Q5. <제시문 3>의 실험에 동의하는가? 오류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오류인가?
- Q6. <제시문 4>에서 에콰도르의 현실과 헌법의 이상이 괴리가 있는데 헌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
- Q7. 지원자는 <제시문 2>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Q8.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원자도 학부 때 쌓인 공부를 막 해치우듯이 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 Q9. 내가 본 법률가들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사건을 사색하면 뒤에 수임한 사건들을 맡긴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 Q10. 본인이 말한 의미의 사색이 <제시문 2>에서 말하는 사색과 동일한지 설명하시오.



C학생 추가질문

- Q1. 제시문의 공통적인 주제를 설명하시오.
- Q2. <제시문 1>의 부모-자식처럼 사랑에 기초한 관계 외에 형상에 기반한, 초월한 관심이 존재하는 관계의 사례가 있는가?
- Q3. <제시문 2>에 나타난 좋은 삶의 사례를 현실에서 찾아보면?
- Q4. <제시문 3>의 실험결과를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 Q5. 보상은 좋은 것 아닌가?
- Q6. <제시문 1>의 필자는 금전적 인센티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 Q7. <제시문 1>의 필자가 금전적 인센티브를 반대한다면 <제시문 3>의 필자와 입장이 같은 것인가?
- Q8. 자연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제시문 4>의 에콰도르 헌법은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 아닌가?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시험장에 입실 후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상호작용 의례’는 버스를 탈 때 줄을 서는 것과 같이 나이, 직업, 지위 등을 모두 배제하고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서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따지지 않는 것은 ‘예의바른 무관심’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의 의례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백인 위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흑인이 그러했고, 현대사회의 경우 노숙자가 그러하다. 상호작용의 의례는 단순한 규칙의 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역동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2>

구빈법은 1601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빈민구제 정책을 통합해 구빈세 징수, 빈민의 취업 알선, 무능력자의 구빈원 등의 수용소의 수용 등으로 도시 부랑자를 줄여 사회질서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시기 빈민들은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가지지 못하였다. 국가는 그들의 나태가 노동 습관과 기술에 악영향을 주어 빈곤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나태는 국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았기에 빈민구제정책은 빈민의 나쁜 노동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국부의 근원인 노동력이 훼손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물론 빈민들이나 부랑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강제로 노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탄압의 의미까지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사회에서의 의미를 갖는 수용과 달리, 실업의 사회에서는 수용이 탄압에 더해 추가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수용한 사람들을 사회적 생산을 위한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3>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아파트 광고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은 유독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물질적 가치로 환원되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난다. 이를 볼 때, 사실 사람들은 평등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평등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렇게 본다면, 자신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평등을, 자신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등을 원하는 것이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생각이 아닐까?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상호신뢰와 연대를 약화시킨다.

<제시문 4>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는 204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새로운 기후 변화 목표를 세웠고, 에너지, 교통, 주택, 건물, 폐기물 제로 등 환경 관련 주요 기후 행동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고임금을 받는 테크 직종 종사자들에 대해서 통근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탄소배출을 낮추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테크기업 노동자가 아니어서 통근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모빌리티 빈민들이 도시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인 구글, 페이스북 등이 실리콘밸리에 들어오면서 도시 내 주거지의 임대료가 상승한 결과, 위의 테크직종 종사자들과 같은 통근 버스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빌리티 빈민들이 도시에서 쫓겨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학생 추가질문

- Q1. <제시문 1> - <제시문 4>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Q2. 각 제시문에서 어떤 그룹이 어떤 그룹에게 차별을 당하는가?
- Q3. <제시문 2>의 저자는 수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Q4. <제시문 3>과 관련해 경제적 격차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예시를 제시하시오.
- Q5. <제시문 4>의 친환경 정책이 모빌리티 빈민들을 도시 밖으로 쫓겨나게 한 원인인가?



B학생 추가질문

- Q1. <제시문 1> - <제시문 4>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Q2.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 Q3. 그렇다면 각 제시문에서 어떤 집단이 배제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Q4. <제시문 1>에서 언급하는 '상호작용의 의례'와 '예의바른 무관심'의 사례를 말해보시오.
- Q5. 그렇다면 역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의 의례가 깨지는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 Q6. 그러한 사례의 경우 자격과 능력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은가?
- Q7. <제시문 3>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 Q8. <제시문 3>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가?
- Q9. 그렇다면 능력 등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큰 물질적 가치를 주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가?
- Q10. <제시문 3>이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로는 무엇이 있는가?
- Q11. 그렇다면 이러한, 임대 아파트 거주자를 무시하는 발언과 더 비싼 돈을 내고 더 좋은 좌석을 원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Q12. 그렇다면 <제시문 1>에서 사람들은 왜 노숙자, 흑인에 대해서 차별하고 배제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가?
- Q13. <제시문 4>의 친환경 교통 정책이 모빌리티 빈민들에게 불이익을 야기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 Q14. 그렇다면 이러한 친환경 교통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 Q15. <제시문 2>의 수용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Q16. 그렇다면 이러한 격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겠는가?
- Q17. 법, 규칙의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Q18. 그렇다면 보호 목적의 격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특별전형] 다음 제시문을 읽고, 시험장에 입실 후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1>

X는 영국의 찰스 1세의 총애를 받아 대신으로 임명되었다. X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를 펼쳐서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결국 X는 그의 정치에 큰 불만을 가진 런던의 Y 가문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 죽게 된다. 암살 당시 X는 포츠머스 근처의 저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Y는 X의 저택에 몰래 잠입하여 X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 살인사건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Y가 X의 저택에 잠입했다는 것, Y가 포츠머스 지역에 갔다는 것, X가 난폭한 정치를 펼쳤다는 것, 찰스 1세가 그를 대신으로 임명했다는 것, 대장장이가 Y에게 칼을 판매했던 것 또한 모두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 사건의 원인으로는 무한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사건이란 것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 그 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건의 원인은 이를 파악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이처럼 인과관계의 수와 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2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사물 자체의 본성이고, 둘째는 사물을 고찰하는 주체가 가진 능력이다.

<제시문 2>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사회적 차이와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시간적 간극이 있었다.

옛날에는 돌잔치와 같은 출산에 대한 통과의례가 존재했다. 이미 태어났어도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았으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으며, 통과의례를 거쳐야만 비로소 사람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반면 오늘날에는 출생이 의료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태어난 아기가 즉각 사회로 편입되면서, 태아와 신생아 사이에 불연속적인 단절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의료기술은 현대인들이 태아와 이미 태어난 아기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혹은 경계선이 생물학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한다. 태아와 신생아 사이의 차이가 생물학적 진실에 근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는 우리가 사회학적 혹은 인지적으로 만들어낸 사회적으로 구성된 선(line)에 불과하다. 태아와 이미 태어난 아기 사이에는 그 어떤 불연속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시문 3>

생물의 역사는 환경과 생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상호작용은 한 쪽 방향으로 흘러갔다.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생물은 그 속에서 살아갔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최초로 환경과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체가 되었다. 인간은 생물이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변화시켰다. 인간은 농산물을 재배함에 있어 본인이 해충이라 명명한 벌레들이 농산물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충을 포함하여 해충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다른 벌레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살충제를 만들어냈다. 해로운 화학약품으로 살충제를 만들어서 해충들을 죽였지만, 이로 인해 이러한 살충제에도 버틸 수 있는 더 강한 해충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인간은 또 다시 이들을 없애기 위해 더 강력한 살충제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생겨났다. 인간은 인위적으로 환경을 통제하려 하는 것보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기조절능력, 자연의 저항능력이 더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시문 4>

오늘날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만연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환경 문제를 단순히 인간이 눈부신 문명 발전을 이룩해냄에 있어서 생기게 된 부산물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양 학자 X는 “인간은 이제 신이 되는 법을 배웠고 신이 되었다. 인간은 신 놀이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둘째, 환경 문제를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예컨대 환경 보호 공원을 조성한다면, 이는 아름다운 나무와 희귀종 생물로 구성된 인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공원에서 행복을 느껴 인간의 행복이라는 이익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환경을 보호함에 있어 본인이 원하는 생물 종만 골라서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관점 모두 옳지 않다. 자연을 인간의 필요와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으로 바라보는 관점, 즉 생태적 리얼리즘이 필요하다. 이에 따르면, 환경 보호는 인간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입맛대로 조성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있는 그대로의 지구 환경을 존재하는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다.



A학생 추가질문

- Q1. <제시문 1>에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무슨 의미이며,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원인이 달라진다는 것이 정당한가?
- Q2. <제시문 2>에서 옛날에는 통과의례가 존재했지만 현대에는 사라졌다고 한다. 왜 현대에는 통과의례가 없을까?
- Q3. <제시문 2>에서 ‘경계선’을 긋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제시문의 예시 외에 우리 주변에서 경계선을 긋는 것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사례로는 무엇이 있는가?
- Q4. <제시문 1>과 <제시문 2>는 공통 주제가 있다. 이는 무엇이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Q5. <제시문 4>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3가지 의견이 제시된다. 이 3가지 의견은 각각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 Q6. <제시문 3>과 <제시문 4>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공통 의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B학생 추가질문

- Q1. <제시문 1>에서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능력에 의해 인과관계를 다르게 보는 <제시문 1>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Q2. <제시문 2>와 같이 사회적 차이, 생물학적 차이를 보여주는 다른 예시를 들고, 그 때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말하시오.
- Q3.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시오.
- Q4. <제시문 4>에는 3가지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인간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평가하시오.
- Q5. <제시문 3>에 나타난 살충제의 악순환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제시문 4>의 저자는 어떻게 평가할지 말하시오.

해설

2025 서울 A 해설

Q1. 모범답변

[서울대 로스쿨 면접은 제시문만 제공하며, 면접관이 학생의 답변에 맞춰 질문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문제의 전체적 의도에 대한 해설입니다.]

가짜뉴스와 민주주의에 관련한 문제이다. 제시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제시문 1>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인간 사회를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언어를 사용해 자신의 의도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타인의 의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스어로 ‘로고스’는 ‘말’을 뜻하며 언어로 전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에서 이성 혹은 진리를 뜻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정치에 참여해야 할 의무, 그리고 권리가 있다.

<제시문 2>는 가짜뉴스 역시 의미가 있다는 표현의 자유시장 논리에 대한 반박 내용이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규제해야 한다.

<제시문 3>은 가짜뉴스가 매스미디어의 특성과 결합해 진실을 왜곡한다는 내용이다. 매스미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진실이 아닌 내용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싫어하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야기라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확산되고 결국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여겨지게 된다.

<제시문 4>는 정보는 진실이 아니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점이 된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묶을 수도 있고, 나쁜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묶을 수도 있다. 천부인권은 신(神)으로부터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것으로써 진실이 아니었지만, 근대 이후 세계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확립시키는 데 충분한 연결점이 되었다. 또한 나치의 우생학은 진실이 아니었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연결점이 되었다.

2025 서울 B 해설

Q1. 모범답변

[서울대 로스쿨 면접은 제시문만 제공하며, 면접관이 학생의 답변에 맞춰 질문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문제의 전체적 의도에 대한 해설입니다.]

제시문 전체의 흐름은 사실과 당위에 관한 것으로써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사실과 당위 논쟁은 20세기의 대논쟁이며, 우생학과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을 연결짓는 논리가 된다.

<제시문 1>은 역사는 사실 그 자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역사는 정보 그 자체가 부족하거나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 사건을 해석하거나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사실이나 진실 그 자체로 보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 먼 과거에 아리아인이 동아시아 지역을 지배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 동아시아를 식민지 지배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이 대표적 사례이다.

<제시문 2>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함부로 불러내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우리가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어 사용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증기기관을 만들어 사용한 결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대규모 병력을 빠르게 집결시킬 수 있게 되어 타국의 군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져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고, 환경오염과 같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빗자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돌아온 마법사인데 인류의 문제점은 인류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I와 같은 강력한 힘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고 그로 인한 의도치 못한 결과는 인간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하며, 환경오염 문제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제시문 3>은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내용이다. 자연주의적 오류는 사실과 당위를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신(神)이 인간을 만들 때 다른 모든 부위를 지배하도록 머리를 가장 위에 두었고 상체에는 심장을 두어 용기를 가지게 했고 하체에는 욕망을 두었다고 하면서 철인왕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신분제를 주장했다.

<제시문 4>는 사실적 경험이 인간의 관념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이다. 내면적 감정을 중시하는 서한소설이 유행하면서 자신에 대한 경험이 대중들 사이에서 문화가 되어 공유되었다. 인쇄술의 발명과 확산으로 인해 소설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가 시작되었고, 이후 매스미디어로 발전하여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관념이 만들어지고 확산되었다.

2025 서울 C 해설

Q1. 모범답변

[서울대 로스를 면접은 제시문만 제공하며, 면접관이 학생의 답변에 맞춰 질문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문제의 전체적 의도에 대한 해설입니다.]

제시문의 전체 흐름은, 소비를 부도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을 ‘경제적 소비’에 적용한 것이다. 첫째, 자유주의 입장에서 소비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을 적용할 수 없다. 둘째,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소비는 도덕적인 판단이 가능한데, 이에 따르면 비난 받을 수 있는 소비가 있다. 사치품에 대한 징벌적 과세, 과소비에 대한 규제 등은 이 연장선상에서 가능하다.

<제시문 1>은 소비 개념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전근대 시대에는 소비가 부도덕한 것이며 공동체에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근대 이후 소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제시문 2>는 의료 전문가가 소비를 위한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마르크스가 제시한 노동 소외에 해당하는데, 노동 소외란 노동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가 의료 전문가로서 자기 직업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료 소비의 비용 대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객체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시문 3>은 소비라는 사실이 윤리적 당위성과 연관된 사례에 대한 내용이다. 무역 확대로 인해 다양한 물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면서, 평범한 개인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 거대한 사회적 문제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전근대 시대에 ‘단 것’은 사치품으로 귀족 등 특권층만 소비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설탕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하려면 생산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사탕수수 등의 대규모 원료 생산을 위한 플랜테이션耕作과 노동력의 동원을 위한 노예제 등이 결합되었다. 노예제가 잘못된 것이고 폐지해야 한다는 당위적이고 윤리적인 논의는 결국 평범한 개인이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상승과 공급자의 이윤 감소라는 사실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

<제시문 4>는 윤리적 생산과 소비에 대한 내용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적 기업이라면서 생산과정의 많은 부분을 외부화한다. 이 외부화한 영역에서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공급망 중 일부 관련기업 혹은 하청업체의 문제일 뿐인 것으로 치부한다. 빅테크 기업은 공급망 중 일부를 담당하는 기업과 계약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공급망을 담당하는 기업이 인권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는 빅테크 기업과의 계약을 위반한 해당기업과 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된다. 빅테크 기업이 공급망을 담당한 기업에게 비윤리적 생산을 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빅테크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4 서울 A 해설

Q1. 모범답변

[학생의 답변에 맞춰 질문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문제의 전체적 의도에 대한 해설입니다.]

제시문들은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의 논쟁을 보여주고 있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일반적인 도덕 규칙에 반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며, 행위 결과의 이익과 관계없이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고 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칸트가 있다. 제시문에서 존재 그 자체로서의 가치인 존엄성, 조건 없는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 개인의 가치관과 자유의사에 따른 창조성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된다.

반면, 목적론적 윤리설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정당한 것이라 보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벤담이 있다. 제시문에서 형상에 기초한 관심, 효율성, 보상, 인센티브, 현실적 한계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된다.

2024 서울 B 해설

Q1. 모범답변

[학생의 답변에 맞춰 질문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문제의 전체적 의도에 대한 해설입니다.]

제시문들은 공통적으로 차별과 배제, 격리에 대해 논하고 있다. 차별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경계가 설정되고 그 경계 안과 밖이 다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차별의 기준과 경계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불합리한 차별로써 해소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유에 따른 결과로써 취급받게 된다. 이를 평등원칙이라 하는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의미이다. 같은 것과 다른 것의 기준은 합리적 이유, 즉 목적과 수

단의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평등과 관련한 제시문에서 능력주의, 보호 목적의 격리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추천도서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능력주의의 폭정>, 대니얼 마코비츠의 <엘리트 세습, 원제: 능력주의의 덫>이 있다.

2024 서울 C 해설

Q1. 모범답변

[학생의 답변에 맞춰 질문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문제의 전체적 의도에 대한 해설입니다.]

제시문은 인과관계에 따른 자연관과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하고 있다. 인과관계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결과에 결정적 요인을 미칠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작동하여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원인이 결과의 방향으로 일방향적일 수도 있고, 원인과 결과였던 것이 순환론적으로 되먹임을 일으켜 결과였던 것이 원인으로 작동하여 본래의 원인이었던 것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환경 문제가 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라는 원인으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인과관계가 일방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시베리아 지역 등의 한대 지역에 얼어 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하게 된다. 결과가 원인으로 작동하여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분자 수준에서 메테인 가스가 물에 갇혀 있는 것이며, 얼음과 비슷하데 불이 붙기 때문에 소위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한다. 메탄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지구온난화 현상을 더 크게 일으키는 온실가스이다.

자연관은 기계론적 자연관과 유기체적인 자연관이 있다.

기계론적 자연관은 인간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계론적 자연관은 자연은 기계와 같이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 마치 함수처럼 x 값을 함수에 적용하면 y 값이 나오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유기체적 자연관은 자연을 유기체로 인식하고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 여기는 것이다. 생태계에서 한 생물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생물들에게도 연쇄적인 영향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이를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기계론적 자연관에서 인과관계는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일방향적인 것 혹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유기체적 자연관에서 인과관계는 일방향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며, 카오스이론에서 제시하는 복잡계와 같이 ‘북경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한 결과가 뉴욕의 폭풍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중앙대 로스쿨 (2025~2019)

* 문제에 대한 해설은 p.72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문제

① 교수:학생 = 3:1 ② 면접 준비 15분, 면접 시간 15분 ③ 메모 허용 ④ 추가질문 있음

메모 및 휴대 여부	문제지, 메모, 휴대 모두 가능함
대기실 특징	대기실 입실 후 조별 명단을 호명하고,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추가질의를 받은 후 다 같이 계단으로 한 층 올라가서 조별 대기실에 착석함. 자리 순서도 앞 번호부터 번호순으로 착석함. 전자기기는 가방 안에 넣어 강의실 앞쪽에 둬. 이후 수험표를 자르고 옷에 부착함.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며 수험표에 부착할 가번호 스티커를 받아 수험번호를 가리도록 붙임
문제풀이실 특징	6명이 각 책상에 앉아서 15분간 문제풀이를 함. 문제지와 메모지, 볼펜이 제공됨. 문제풀이하는 강의실 뒤편에 아날로그 시계가 있음
면접고사장 특징	면접관과의 거리는 2미터 정도이며, 입실 후에 기초발언 7-8분 정도로 할 것을 지시받음. 시계가 없어 기초발언 시간을 확인 불가하고, 개인 아날로그 시계는 허용됨. 종료 1분 전 밖에서 노크를 함

2025 중앙 A 문제

※ [가군]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 (가) 유추는 기능적이고 상징적인 유사성을 의미한다. 반면 닮음은 색이나 형태적 유사성을 의미한다.
- (나) 포르투나(Fortuna)는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운명의 여신이다. 포르투나는 둥근 지구 위에서 베일을 눈에 쓰고 금은보화를 흩뿌리는 외양을 보인다. 반면, 유스티티아는 둥근 지구 위에서 베일을 눈에 쓰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 (다) 주사위 놀이의 역사는 길다. 이집트에서는 왕조 시대에 정육면체 주사위가 존재했다. 통일신라 시대의 목제주령구는 참나무로 만든 14면체 주사위를 사용한다.
- 체스는 1500년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도의 차투랑가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투랑가는 4개 군단이라는 뜻으로 보병, 기병, 전투 코끼리, 전차를 말한다. 이 형태는 각각 현대의 폰, 나이트, 비숍, 룩으로 변화하는 기물들을 보여준다. 차투랑가는 체스의 중요한 특징 2가지를 가진 최초의 게임인데, 서로 다른 기물들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기물에 의해 게임의 승패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백개먼(Backgammon)은 전략 보드 게임으로 주사위와 체커를 이용하는 게임이다. 두 명의 플레이어는 각각 백개먼 전용 조각인 ‘체커’를 다른 한 쪽으로 움직이면서 대결한다. 이 게임은 기원전 3000년경에 중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 Q1.** ‘오렌지와 야구공은 닮았다’, ‘야구공과 태양은 닮았다’를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제시문 (나)에서 각 여신들을 무엇에 의인화하여 유추하였는지 평가하시오.
- Q2.** 제시문 (다)의 3가지 게임을 ‘행운과 이성’, ‘우연과 필연’으로 어떻게 대립하는지 나타내고,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 판단하시오.

 추가질문

- Q3.** 두 여신 모두 베일을 눈에 쓰고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이 있는가?
- Q4.** 두 여신 모두 지구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데 그 둘은 동일한 것인가?
- Q5.** 불편부당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2025 중앙 B 문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프로이트는 <애도와 멜랑콜리(Trauer und Melancholie)>에서 인간이 상실을 경험할 때 보이는 두 가지 주요 반응, 즉 애도(mourning)와 멜랑콜리(melancholia)를 구분하여 설명했다.

애도(Mourning)는 사랑하는 대상(사람, 이상, 가치 등)을 상실한 후 겪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심리적 반응이다. 상실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대상에게 투여되어 있던 심리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점차 철수시켜 다시 자아로 회수하고, 결국 새로운 대상이나 가치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진행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상실을 극복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단계로 간주된다.

멜랑콜리(Melancholia)는 애도와 마찬가지로 상실에 대한 반응이지만, 다른 측면이 있다. 멜랑콜리의 경우, 상실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대상을 내면화하여 자아와 동일시한다. 즉, 상실한 대상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자아 일부와 혼동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아가 분열되고, 자기비하, 죄책감, 무가치감, 심한 우울감 등 병리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프로이트는 이를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로 보았다. 멜랑콜리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며, 상실의 고통이 끝없이 반복되고 새로운 애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이다.

(나) 피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샬럿, 나는 차갑고 치명적인 잔을 받아 죽음의 한 모금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이 그 것을 건네주었고, 나는 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내 존재의 소망과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차갑고도 굴하지 않는 손으로 죽음의 청동 문을 두드립니다. 오, 당신을 위해 죽는 행복을 누렸다면! 샬럿, 당신을 위해 기꺼이 제 자신을 희생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에 평화와 기쁨을 되돌려줄 수만 있다면, 어떤 결의와 기쁨으로 내 운명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친구를 위해 피를 흘리고, 그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천 배나 더하는 것은 오직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샬럿, 지금 입고 있는 이 드레스에 묻히고 싶어요. 당신의 손길로 신성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께 간청했거든요. 제 영혼은 무덤 위로 솟아오릅니다. 주머니를 뒤지는 건 원치 않아요. 처음 봤을 때 아이들과 함께 가슴에 달고 있던 분홍 리본 매듭이여, 오, 아이들에게 천 번이나 입을 맞춰 주고, 그 불행한 친구의 운명을 말해 주세요! 아이들이 제 주변에서 노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샬럿, 당신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을 떠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리본은 제 생일에 당신이 준 선물 이었는데, 제 곁에 묻어야겠어요. 모든 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때는 제가 이 길을 걷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제발, 평화를!

짐이 가득 찼어요. 시계가 12시를 쳤어요. 아멘. 샬럿, 샬럿! 잘 가, 잘 가!”

이웃 사람이 그 섬광을 보고 귀충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해지자 그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아침 6시, 하인은 촛불을 들고 베르테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주인이 바닥에 쓰러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옆에는 귀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인은 주인을 불러 품에 안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아직 생명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듯했다. 하인은 외과의를 부르고 알베르를 데리러 갔다. 샤를로테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차가운 전율에 휩싸였다. 그녀는 남편을 깨웠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에 젖은 하인은 끔찍한 소식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샤를로테는 알베르의 발치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다) 황동규, <즐거운 편지>

*전문이 출제됨

- Q1.** 애도와 멜랑콜리를 비교설명하고, (나)의 ‘나’의 심리상태를 분석하시오.
- Q2.** (다)를 참고하여 (나)의 ‘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추가질문

- Q3.** 지원자 본인은 애도나 멜랑콜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2024 문제

① 교수:학생 = 3:1 ② 면접 준비 15분, 면접 시간 15분 ③ 메모 허용 ④ 추가질문 있음

2024 중앙 A 문제

※ [가군 오전]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 (가) 신문을 들어라.
가위를 들어라.
당신의 시에 적합할 만한 분량의 기사를 이 신문에서 골라내라.
그 기사를 오려내라.
그 기사를 형성하는 모든 낱말을 하나씩 조심스레 잘라서 자루 속에 넣어라.
조용히 흔들어라.
그 다음에 자른 조각을 하나씩 꺼내보아라.
정성 들여 베껴라.
그리하여 당신은 무한히 독창적이며 매혹적인 감수성을 지녔으나 무지한 대중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작가가 될 것이다.
- (나) 라푼타에서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본인이 책을 만드는 작업장을 소개시켜주었다. 작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기계장치를 돌리고 있었다. 장치는 여러 면이 있고, 레버를 돌리면 그것이 돌아가면서 그 면 중 하나가 도출된다. 그리고 각 면 위에는 단어들이 적혀있다. 여러 장치들이 이어져 있고, 레버를 돌리면 무작위로 여러 단어의 조합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36명의 제자들이 작동했다. 작동시켜서 말이 되는 문장이 나오거나 하면 받아 적어서 교수는 책을 만들어 냈다. 이런 방식으로 수백페이지의 정치, 철학, 역사 등 책을 만들었다. 교수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적은 노동력으로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책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 (다) 잭슨 폴록이 작품을 만드는 방식은 매우 특이하다. 캔버스와 물감을 준비한 이후, 그 작가는 아무런 패턴이나 경향 없이 캔버스에 물감을 쏟는다. 아무런 형태와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작품이 되는 것이다. 어떤 비평가는 잭슨 폴록의 작품에 대해, 그의 작품이 분출하는 양상을 잘 표현한다고 말했다.

Q1. 제시문 (가)와 (나)의 글쓰기의 비교기준을 설정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말하시오.

Q2. 제시문 (다)의 작품을 만드는 방식과, 제시문 (가)의 시(詩) 작법(作法)의 유사점을 말하시오.

A학생 추가질문

Q3. 최근 Chat GPT와 같은 AI 모델이, 사람이 일정 정보만 입력하면 무작위하게 예술작품을 뽑아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물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Q4. 법률 실무에서 무작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가?

**B학생 추가질문**

- Q3.** 결국 우연성이 제시문의 핵심이 될 텐데, 각 제시문의 우연성의 정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Q4.**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가)와 (다)는 작품이지만, (나)는 작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 Q5.** 만약에 (가)를 만들 때 기사를 심혈을 기울여서 작가가 골랐다면, 우연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까?

2024 중앙 B 문제

※ [가군 오후]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 (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 이를 구체화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여야만 한다.
- (나)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수 덕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없다면 법치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민주주의 없는 의회, 민주주의 없는 법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대의제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해야 한다. 만약 그 균형이 깨져 어느 한 쪽이 강해지면 권위주의나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다.

- Q1.** 민주주의가 국민의 일반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해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Q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말하고, 법치주의가 악용될 수 있는 사례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A학생 추가질문**

- Q3.** 포퓰리즘에 대해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은 바람직한 현상인가?
- Q4.**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인가?
- Q5.**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

**B학생 추가질문**

- Q3.** 포퓰리즘이 단기적 인기를 위해 국익에 저해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무엇이 국익인지, 국익에 저해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 (가) 인간은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공적인 사안을 깊이 사유하게 되고 생각과 감정을 크게 키울 수 있다. 또한 공적인 일에 참여할 때 사익보다 공익을 더 중시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그들은 공공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동일하게 여기고 사적인 일로 공적인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 (나) 정치적 관심도를 기준으로 유권자는 호빗, 홀리건, 벌컨으로 분류된다.
- 첫째, 호빗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들의 일상에만 관심을 가지며 정치 관련 지식도 부족하다.
- 둘째, 홀리건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 세력을 항상 옹호하며 자신이 그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자기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고 다른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도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 셋째, 벌컨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벌컨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데, 사람들은 누구나 편견이 있으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 (다) 권세가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법을 어기더라도 자기 이익을 보전하려 한다. 그러나 법술을 아는 선비는 반드시 멀리 보고 밝게 살펴 사사로운 책략을 밝혀내려 한다. 법령을 집행할 수 있는 선비는 강하고 곧기 때문에, 임금의 치우침 또한 바로 잡으려고 하며 임금의 명이라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렇기에 법술을 아는 선비는 언제나 고독하다.

Q1.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를 비판하십시오.

Q2. 제시문 (나)의 홀리건과 제시문 (다)의 권세가의 유사점을 비교하고, 제시문 (나)의 벌컨과 제시문 (다)의 법술을 아는 선비의 유사성을 비교하십시오.

추가질문

Q3. 제시문 (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Q4. 지원자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중 어느 관점에 찬성하는가?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우타는 나움부르크의 백작 부인인데, 평범한 여성으로 독실한 신자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죽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했고, 교회는 우타의 동상을 세워 추모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치 정권은 우타를 독일 민족의 전사이자 영웅으로 묘사하고 국경의 수호자이자 독일의 여성상으로 추앙했다. 나치 독일은 우타에 대한 민족적 집단기억을 만들어내고 재생산한 것이다.



나움부르크의 우타

(나) 과거에 공동된 영광을 누렸던 것, 현재에 공통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위대한 일을 함께 이루었고 여전히 그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한 인민이 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들인 것입니다. …(중략)… 민족은 이미 치러진 희생과 여전히 치를 준비가 되어있는 희생의 욕구에 의해 구성된 거대한 결속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거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확실한 사실로 요약되기도 합니다. 동의, 함께 공동의 삶을 계속하기를 명백하게 표명하는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존재는 개개인의 존재가 삶의 영속적인 확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인민투표입니다. …(중략)… 인간은 인종의 노예도, 언어의 노예도, 종교의 노예도, 강물의 흐름의 노예도, 산맥의 방향의 노예도 아닙니다. 인간들의 대결전, 건전한 정신과 뜨거운 심장이야말로 민족이라 부르는 도덕적 양심을 창출합니다. 이 도덕적 양심이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버린 그 희생들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한, 그것은 정당하며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국경선에서 의심이 솟아나게 되면 다투고 있는 주민들에게 자문을 하십시오.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질 권리를 마땅히 가지고 있으니깐요.

(다) 인간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신조와 함께, 인정하지 않는 고정관념과 연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신조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어떤 것이다. 반면, 연상은 주위에서 흡수하는 어떤 것이어서, 동의하거나 인지하지 않아도 습득되는 문화적 지식이다. 이에 따르면 신조는 당신이 원해서 구독하는 신문이고, 연상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 주소를 얻어낸 회사가 보낸 스팸 메일과 같다. 스팸 메일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지만, 당신의 수신함을 채우고 있고 그들의 발송자 명단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반면 명시적 편견을 지닌 사람은 선택한 신조와 숨겨진 고정관념 간에 갈등이 없다. 그들은 스팸 메일의 구독자다.

Q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민족적 영웅을 이상화하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Q2. 제시문 (가)의 '우타'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메커니즘을 제시문 (다)를 활용해 설명하시오.

추가질문

Q3. 현대에서 암묵적 편향을 야기하는 다양한 활동들의 예시를 들어보시오.

해설

2025 중앙 A 해설

Q1. 모범답변

오렌지와 야구공은 둥근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닮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야구공과 태양 역시 둥근 형태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닮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의 포르투나는 눈을 가린 채로 금은보화를 훔썬다는 점에서 행운을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스티티아는 눈을 가린 채로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판결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정의를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Q2. 모범답변

첫째, 주사위 게임은 행운과 우연이 지배하는 게임입니다. 주사위 자체는 이성과 필연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주사위를 굴려야 하는 목적을 이성적이고 필연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작위적 결과가 나와야 하는 추첨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사위 굴리기가 적절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체스는 이성과 필연이 지배하는 게임입니다. 체스는 서로 다른 기물들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절한 순서로 상대방의 선택에 맞춰 전략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행운이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상대방이 우연적으로 잘못된 수를 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유리하게 될 것인지 불리하게 될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필연적인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백개머는 행운과 이성, 우연과 필연이 동시에 작용하는 게임입니다. 전략적 선택에 따르기 때문에 이성과 필연이 작용하나, 주사위를 이용해 행운과 우연 또한 작용하게 됩니다.

법조인은 이성과 필연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 변호사가 어떤 사람일 것인지, 이를 최종판단하는 법관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는 우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이성적 판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도출됩니다. 따라서 법조인은 이성과 필연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조인의 자세는 체스를 두는 사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 중앙 B 해설

Q1. 모범답변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을 겪으면 애도를 하는 선택을 하거나 멜랑콜리에 빠지거나 하게 됩니다. 애도는 상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르며 그 대상을 마음 속에서 떠나보내는 건강한 과정입니다. 반면 멜랑콜리는 상실의 대상을 내면화해 자아와 동일시하고, 상실의 원인이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비난, 무가치감, 우울에 빠지는 병리적 상태입니다. 특히 프로이트는 멜랑콜리의 증상으로 부끄러움 없는 자기비

난과 이유 없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인 베르테르이고, 로테를 향한 사랑이 좌절되고 상실되자 멜랑콜리에 빠지게 됩니다. 멜랑콜리는 무의식적으로 상실한 대상을 자기 안에 들여와 자아와 동일시하고, 그 대상에 대한 억압된 증오가 자기비난으로 전환합니다. 베르테르는 로테를 향한 사랑이 좌절된 뒤, 그 상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에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베르테르는 상실한 대상인 로테를 잊지 못한 채 자기 내면에 동일화(identification)한 결과,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내부에서 찾습니다. 결국 베르테르는 자기비난과 이유 없는 슬픔, 무기력, 자기파괴적 충동에 시달린 끝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Q2. 모범답변

(다)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을 겪었으나 이를 애도로 전환한 것입니다. 애도는 상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르며 그 대상을 마음 속에서 떠나보내는 건강한 과정입니다. (다)의 화자는 상실을 겪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대상의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인 베르테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멜랑콜리가 아닌 애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프로이트는 멜랑콜리가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라 분석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에 해당하는 것이고, 멜랑콜리는 상실한 대상을 자아와 동일시하면서 자기비난, 자기혐오, 현실과의 단절 등의 병리적 증상을 보이는데 이것이 나르시시즘적 퇴행의 전형적 모습이라 했습니다. 멜랑콜리와 나르시시즘적 퇴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인식하고 자기애적 동일시를 벗어나야 합니다.

멜랑콜리에서 애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상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를 단순히 개인의 우울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상실을 겪은 자가 그 상실이 자신의 탓이고 그 극복도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는 개인적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적 퇴행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를 늘릴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 심화되고 노동시간이 길어 타인과의 건전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경쟁의 완화, 여가시간 확보, 가족관계의 강화 등을 위한 법률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4 중앙 A 해설

Q1. 모범답변

제시문 (가)와 (나)의 글쓰기의 비교 기준은 무작위성과 그에 대한 통제입니다.

공통점은 글쓰기에서 무작위성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는 신문기사를 잘라 무작위로 섞은 후 발생하는 결과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나)는 기계를 통해 무작위로 나오는 내용을 반영해 책을 출간합니다.

무작위성의 가치와 제작 주체에 의한 통제 정도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는 신문기사를 자르고 무작위로 섞어 나온 결과를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대로 표현합니다. 무작위성은 그 자체로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지 않더라도 일반 대중이 난해하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무작위성에 대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계의 레버를

당겨 나오는 것을 사용하는 일정수준의 무작위성으로 작업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말이 되는지 여부와 정도에 따라 책에 쓸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무작위성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한 기준, 즉 말이 되는지를 주체인 교수가 판단하고 무작위성 중에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배제하는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Q2. 모범답변

유사점은 무작위성과 주체의 통제 수준입니다.

(다)의 작품은 무작위로 물감을 뿌린 것이 곧 예술 작품이 되며, 이 과정에서 작가는 아무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모양이나 뿌려지는 방식 등을 결정하지 않고 단지 무작위성에 따라 드러난 색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가)의 시 작법 또한 무작위로 꺼내어 그대로 베낀 시가 예술 작품이 된다고 하며, 그 결과로 드러난 시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난해한 예술이라 여겨질 것이라 합니다.

2024 중앙 B 해설

Q1. 모범답변

민주주의는 국민의 일반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르면, 일반의지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집하고 조정해서 법이라는 명확한 언어로 공표하여 국민 모두가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은 일반 대중이 결정권을 가질 경우, 단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장기적인 국익을 저해하여 최종적으로는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플라톤은 이를 중우정치(衆愚政治)라 하였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민주체제는 통치자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통치 행위를 하는 체제입니다. 일반 대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기만 하면 좋아하고 자신이 받은 그 이익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결국 민주체제는 포퓰리즘(populism)이 만연한 정치체제이고, 필연적으로 일반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참주(僭主)가 등장해 참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수단이라 하며, 상호보완적 관계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민주주의가 절차로서 선행한 이후에서야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왕정국가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된다면 이는 권력자의 권력 강화를 위한 것이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포퓰리즘에 대해 비판하면, 국민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단기적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대표를 선출해 이들에게 국민의 의사를 대신 실현하도록 위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의제 민주주의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리라 예상되는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들 중에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임기를 보장하고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면 그를 응징하고 더 잘 실현할 것이라 여겨지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2. 모범답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여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법률로 규정해 국민이 자신이 정한 법률을 스스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러

한 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결합하면 동일성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법은 국민이 국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인 일반의지를 명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는 자칫 형식적 법치주의로 흐를 경우 국민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하면 국민 다수가 결정한 법률 절차에 따른 결과는 옳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일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나치가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수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방어적 민주주의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적 가치, 즉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평등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는 법치주의에 근거했다라도 부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치주의에 따라 학살이나 영장없는 체포 등이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부정이므로 명백하게 부정의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부정의한 내용의 법률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기본권 실효제도 등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형식적 법치주의로 인한 역사적 악용 사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2024 중앙 C 해설

Q1. 모범답변

제시문 (가)는, 인간은 정치 참여를 통해 공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민주적 학습이라 하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배심원제도, 공론화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반면, 제시문 (나)는 유권자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라고 합니다. 호빗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홀리건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벌컨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치에 참여하는 대부분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홀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경우, 포퓰리즘이 만연하여 공익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Q2. 모범답변

제시문 (나)의 홀리건과 제시문 (다)의 권세가의 유사점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홀리건과 권세가 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자기 이익을 보전하려 합니다.

제시문 (나)의 벌컨과 제시문 (다)의 법술을 아는 선비의 유사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벌컨과 법술을 아는 선비는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그것이 비록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익이 실현된다면 받아들인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2024 중앙 D 해설

Q1. 모범답변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은 민족적 영웅을 우상화함으로써 민족을 단합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가)는 신실

한 여성인 우타를 독일의 여성상이자 국경의 수호자로 이상화했습니다. 우타를 독일의 우상이자 상징으로 만들어 독일 민족을 단합시킨 것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은 위로부터 만들어져 상상된 민족과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민족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의 우타는 신실한 여성이었으나 이후에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족 이상입니다. 나치 독일은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단합을 이끌어낼 구심점이 필요했던 나치는 우타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우타에게 투사해 독일의 여성상, 국경의 수호자 등의 이상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상된 독일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민족 구성원들이 민족적 영웅을 통해 하나의 민족으로 단합하기를 스스로 원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Q2. 모범답변

(가)의 우타가 영웅이 되는 메커니즘은, 나치 독일이 주변 환경과 사회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암묵적 편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치는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고, 이를 독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를 실현했습니다. 나치는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과 독일의 영웅들을 교육 과정에서 가르쳤고, 라디오와 TV 등 당시의 최신기술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노출시켰습니다. 나치 독일은 사회문화적으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민족적 이상화를 시도하고 노출시킴으로써 우타를 민족의 영웅으로 상상되게 만들었습니다.

해커스

김종수

로스쿨 면접

200주제